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KINU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KINU 통일연구원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31-7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매장: 734-6818·사무실: 394-0337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 약 ····· vii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3
2. 연구의 가치 및 구성 ····· 7

II.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의미와 현황 ····· 9

1. 사업의 의미 ····· 11
2. 사업의 추진 현황 ····· 19

III.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 ····· 29

1. 한국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 31
2. 북한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 40
3. 러시아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 44

IV.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쟁점 및 제약요인 ····· 53

1. 북한 변수로 인한 정치적 제약요인 ····· 55

2. 경제적 제약요인 ····· 63
3. PNG 사업의 문제점 ····· 71

V. 향후 과제 ····· 75
1. 명확한 추진원칙의 설정이 필요 ····· 77
2. 당사국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 79
3. 북한 리스크 관리방안 ····· 81
4. 3자협력 구조의 활성화 방안 ····· 84

VI. 결 론 ····· 87

참고문헌 ····· 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9

표·그림, 부록 목차

[표-1] 러시아 PNG 도입 예상 일정 ····· 24
[표-2] 향후 추진절차와 단계별 주요사업 ····· 28
[표-3] 국내 천연가스 도입선별 비중 ····· 32
[표-4] LNG와 PNG의 가격 비교 ····· 36
[표-5] 유럽 주요 가스관 프로젝트의 갈등 구조 ····· 57

[그림-1]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노선도 ····· 22
[그림-2] 러시아 천연가스 예상 노선도 ····· 27
[그림-3]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의존도 ····· 32
[그림-4] 남북러 가스관 연결 현황 ····· 46
[그림-5] 'J'자형 노선과 'Y자형 노선' ····· 82

[부록-1] ····· 101
[부록-2] ····· 103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때가 되면 대두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시차를 두고 다시금 부각되었다가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有耶無耶) 되어 버리는 주기적 싸이클을 반복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등에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2011년 11월 2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경유 PNG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2013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에 착수, 2016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3국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협력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통해 시작된 본 사업은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스관 사업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조명(spotlight)을 받는 이유는 가스관 연결 과정과 연결 이후 남북러 3국 모두가 확보하게 될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즉, 이 사업은 3국 모두에게 공히 'win-win-win'이 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거해야 할 장애요인들 역시 적지 않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북한 관련 리스크'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남북한간 관계 개선 및 복원이 전제되어 양국간 강도 높은 신뢰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태생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이 왜 매번 반복적으로 이슈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한 경유 PNG사업은 그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매 정권마다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북한 경유 PNG 사업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남북러 3국 모두에게 어떤 정치·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동시에 어떠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더불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의 객관적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현실성이 낮은 이 사업을 ‘이명박표 3대 경협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 사업은 분명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다. 3국간 협상이 최적의 접점을 찾아 실제 사업이 시작된다면, 한국·북한·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다. 북한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의 통관료를 챙길 수 있고, PNG 건설 참여를 통한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PNG 통과 지역에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전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러시아는 향후 30년간 안정된 가스 시장을 확보해 총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한·중·일이란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안정적 가스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PNG건설에 투입될 비용을 제외하고도 LNG보다 약 30~70%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협력에 이은 경제 및 산업분야의

협력으로 파급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3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과 부수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본 사업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 리스크(risk)'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선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현재 남북관계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만큼 긍정적이지도 않다. 더더욱 북한의 기존 행태에 비춰볼 때, 언제라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가스관 협상시 이에 대한 제도적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즉, 러시아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보장, 북한이 가스관을 막거나 중간에 탈취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물량 부족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북한 리스크를 막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셋째, 북한 변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경제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은 경제적 실현가능성보다는 남북관계 국면전환용의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 20년간 꾸준히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정치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북한 경유 PNG사업은 과거 선례에 비춰 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그럼에도 문제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정치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정치와 경제 두 영역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는 학계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항상 정치가 경제보다 상위 개념이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8.22)를 취한 사건, 또한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사업을 중단시킨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간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의 경협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언제라도 남한 혹은 북한 당국에 의해 단절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모두 각각 이익의 내용과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 다르다. 3국 모두 이번 가스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와 시급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곳곳에서 3국간 이해관계와 계산법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직접적인 경제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한국은 직접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부수적 경제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경제적 목적과 대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영향력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스관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선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큰 틀에서 3국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므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선 뭔가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이유면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면 정치적 이유, 안보전략적 이유면 안보전략 이유로 인한 3국간 어떠한 합일점이 매칭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분명 3국 모두에게 정치·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정치적 필요도 있고, 경제성도 있으며, 각종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사업 실행을 현실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산재해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북한 관련 리스크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확한 추진원칙의 설정, 분쟁의 최소화 방안강구, 북한 리스크 관리방안, 3자협력 구조 활성화 방안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본 사업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I. 서론

1. 연구 목적

2011년 11월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A. Medvedev)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지었다.[1] 회담 직후 이루어진 가즈프롬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사는 2013년 9월 러시아의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에 착수, 2016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이다.[2]

한국, 북한, 러시아 3국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협력은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통해 시작된 가스관 연결사업은 2000년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거쳐,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기 <한러간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PNG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러 정상간 가스관 건설 공사에 대한 합의를 2008년 9월에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 경유에 대한 북측의 부정적 반응, 북핵문제로 인한 제재 국면,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사건 등 일련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난 8월 24일 북러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극적 참여의사 표명 이후부터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 청와대 뉴스(2011.11.03),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1년 12월 1일).

[2] 러시아 가즈프롬사 홈페이지, www.gazprom.com/, (검색일: 2011년 12월 2일).

곧바로 러시아정부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사 간 <러시아 PNG 로드맵>을 체결했으며, 10월 26일에는 한러 양국의 장관급이 참석하는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3] 이렇게 현재 PNG 건설을 위한 제반 합의를 마쳐 놓은 상태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러시아의 입장변화가 그 주요 요인이었다.[4] 탈냉전 이후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레짐에 소극적 노선을 견지하는 한편, 에너지정책에서는 유럽중심의 전략을 구사해왔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재개된 북미대화 등을 전후해 러시아의 대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그리고 에너지전략에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북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 견제라는 러시아 외교노선 강화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그 방법으로 북한 핵개발에 대한 강한 비판과 동시에 북러관계 복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기존 유럽중심의 에너지 수출전략을 공급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극동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한중일 시장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가스관 사업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조명(spotlight)을 받는 이유는 가스관 연결 과정과 연결 이후에 남북러 3국 모두가 확보하게 될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즉, 이 사업은 3국 모두에게 공히 'win-win-win'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것이다. 우선 수요국인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입

3- 김용래, "한러, 남-북-러 가스관 현실화에 협력", 『연합뉴스』, 2011년 10월 26일자.

4- 유진숙, "한러 정상회담 평가: 가스관사업의 현실성과 6자회담 가능성",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제204호, 2011년 11월 12일, p.2 참조.

선 확보라는 에너지안보적 측면과 각종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그리고 공급국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출시장의 교두보 확보와 더불어 낙후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에게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빙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대중·대미 견제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3국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거해야 할 장애요인들 역시 만만치 않다. 한축에서는 북한 변수(risk)로 대변되는 정치·안보적 제약요인, 한국과 러시아간 가스관 공급가격 협상 및 PNG 건설비용 협상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제약요인, PNG 사업의 근본적 문제 및 3자간 협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제약요인 등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에서는 가스관 연결 전 협상과정시 넘어야 할 과제, 실제 PNG 건설과정에서의 산적한 난제들, 가스관 연결 후 가스 공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각종의 제약요인 등이 잔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업 실행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북한 관련 리스크이다. 즉, 남북관계 악화 후 북한에 의한 파이프라인 차단 및 가스의 무단유용 가능성, 통과 수수료에 대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 가스관 연결에 대한 북한 내 군부의 집단반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 대한 중대한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남북한간 관계 개선 및 복원이 전제되어 양국간 강도 높은 신뢰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추진되기 매우 어려운 '태생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이 왜 매번 반복적으로 이슈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 20여년간 북한 경유 PNG 사업은 그 성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 정권마다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2011년 하반기 들어 북러 정상회담과 한러 정상회담 이후 3국간에 적절한 접점을 찾으며 그 현실화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야 많은 과제와 해결해야 할 산적한 장애로 시계(視界)가 밝지 만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 이후 지난 20년간 때가 되면 대두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시차를 두고 다시 부각되었다가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주기적 싸이클을 반복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북한 경유 PNG 사업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남북러 3국 모두에게 어떤 정치·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동시에 어떠한 제약요인이 상존하는가? 그리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그 어느 때 보다 남북관계의 객관적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 사업을 '이명박표 3대 경협사업'이란[5] 이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5- '이명박표 3대 경협사업'이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부산-개성-신의주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연결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뜻함.

2. 연구의 가치 및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라는 주제는 시기적 적실성(current issue)이 매우 높은 주제로서, 정책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 가치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정책적 가치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방안을 가스관 협력을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지난 4년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남북 경협의 중단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가스관 연결과 나아가 에너지 및 경제협력이라는 분야로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활용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남북러 3자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에서의 협력 사례는 향후 다른 국가와 또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시 중요한 경험과 사례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중요한 정책적 활용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는 우선 남북, 한러, 남북러, 그리고 다자간 에너지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다자협력에 대한 적실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분석하다 보면, 다자협력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다자협력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국가들 간의 국제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남북러 가스관 분쟁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책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연구로서, 이론과 정책의 병행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연구의 가치, 그리고 본론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의 진행 방향 및 구성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본론'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의미와 추진현황, 3장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장, 제4장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제약요인, 제5장은 향후 과제 및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배경 및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및 파장에 대해 관련국인 한국, 북한, 러시아 등 각 국가별로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 경유 PNG 사업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북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각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와 대책 등을 제시해 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본론에서 충실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정리하면서 마무리 할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칠 것이다.

Ⅱ.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의미와 현황

본 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배경 및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2011년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의 의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에게만 '득'(gain)이 되고, 나머지 국가에게는 '실'(loss)이 되는 제로섬(zero-sum)적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남북러 3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긍정적 기대효과(positive-sum)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물론 이러한 장밋빛 전망 이외에 각종의 제약요인과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만 된다면 분명 큰 경제적 효과와 각종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우선 경제적으로 수요국인 한국과 북한에게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라는 에너지안보적 측면과 공급국인 러시아에게는 안정적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경제성 측면 등에서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국과 북한에게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라는 안보적 측면의 이익이 예상되고, 러시아에게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익이 예상되는 등 3국 모두에게 정치적·전략적 효과가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 경유 PNG 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경제적 측면, 남북관계적 측면, 에너지안보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경제적 기대이익과 효과

북한 경유 가스관 연결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경제성 측면'에 있다. 2008년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경유 PNG 사업 추진 양해각서(MOU)의 체결[6]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2011년 8월 24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적극적 참여의사 개진 이후 본격적 진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한러 간에는 지난 11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서류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대기 중인 상태이며,[7] 북러간에도 하산과 나진을 잇는 철도를 현대화하면서 가스관 연결을 위한 준비를 이어 나가고 있다.[8]

북한의 경우는 가스관 연결시 연간 1억에서 1억 5000만 달러의 국경통과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또한 PNG 건설 참여를 통한 노동자의 인건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PNG 운영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9] 또한, 만약 북한이 배관 운영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배당수익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PNG 통과 지역에 중소규모의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북한은 전력난을 완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시 극동지역 최대 수력발

6– 당시 체결된 MOU에서의 추진 계획은 △2009~2010년 PNG 공급노선 공동타당성 조사 및 노선 통과국간 협의 진행, △2010년 말까지 상업협상 완료 및 매매계약(SPA) 체결, △2011년~2014년 기간 중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 건설, △2015년부터 러시아산 PNG 도입 계획임.

7– 노효동, "한러 정상 '가스관' 정치적 의지 재확인," 『연합뉴스』, 2011년 11월 2일자.

8– 노재현, "북러, 나진-하산 철도 12.8㎞ 현대화 완료," 『연합뉴스』, 2011년 8월 21일자.

9–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2011 민화협 화해공영포럼(2011.11.15), p. 62.

전소인 <부레야 수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10] 따라서 이 사업은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연간 국내총생산이 247억 달러밖에 안되고,[11] 1인당 GDP가 660달러 밖에 안되는[12] 국가에게 이번 사업은 그야 말로 대형 국책사업임에 틀림없다.

러시아의 경우는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기존 유럽중심에서 극동 지역으로 관심을 돌린 상태이다. 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부흥과 유럽에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사할린-3'과 같은 대형 가스전을 개발해 온 러시아에게 이번 사업은 매우 매력적이다. 특히 선박이 아닌 PNG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출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고,[13] 더불어 동시베리아의 소규모 가스전까지 연결해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는 남다르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러시아는 향후 30년간 안정된 가스시장을 확보해 예상되는 수익이 총 900억 달러 규모이고,[14] 이를 극동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는 2009년 6% 수준이었던 아태시장 수출비중을 2030년까지 18~19% 수준까지 증대시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15] 이렇게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이

10- 『로동신문』, 2011년 8월 22일자.

11- OECD, 『2010년 한국 경제 보고서』; 김병호, "한국 GDP 북한의 38배, OECD 남·북한 경제 비교," 『매일경제』, 2010년 6월 18일자.

12- 김천구, "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2011.8.7) 참조.

13-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LNG 형태로 수출해오던 것을 PNG 방식으로 바꾸면 가스 액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정은 외, "가스관이 남북관계 왜 더 도그," 『동아일보』, 2011년 9월 3일자.

14- 윤규식, "권력세습 안정화 노린 경제·외교적 행보," 『국방일보』, 2011년 9월 7일자.

15-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호, p. 39.

익이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러시아로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PNG를 통한 가스 도입은 액화 비용이 들지 않고 대규모 저장시설도 필요 없기 때문에, LNG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실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25년 기준으로 LNG의 경우는 수송비 포함 총 226억 달러의 지출이 예상되는 반면, PNG의 경우는 47억 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연간 1억 5000만달러 수준인 북한 통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PNG는 LNG의 약 1/3밖에 되지 않는다. 즉, PNG로 수입하면 현재보다 약 30~70% 싼 가격에 가스를 들여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16]

지난 9월 27일,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남북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배관 설치 비용은 총 22억 3,560만 달러, PNG 북한 통과 비용은 연 1억 1,840만 달러로 추산, 남한이 25년간 러시아 가스 750만 톤을 수입한다는 가정 아래 PNG 가격은 1mmbtu(47.667mmbtu=0.73t)당[17] 0.31달러로 LNG의 9.4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추정했다.[18] 이러한 수치는 북한 경유 PNG 사업의 경제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가스관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해,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16– 권원순, "북한 통과 가스 파이프라인", 『매경이코노미』, 제1626호, 2011년 10월 12일자.

17– MMBTU(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영국의 열량단위, 1mmbtu (47.667mmbtu=0.73t).

18– 권원순 교수는 "PNG 비용은 건설비, 수송원가, 도입비용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특히 단가문제는 중요한 변수"라며, "LNG 방식을 선호해온 푸틴 총리가 만약 내년에 새 대통령에 취," 『연합뉴스』, 2011년 9월 27일자.

천연가스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한국의 석유화학기술을 활용한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PNG 사업은 한국, 북한, 러시아 3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과 부수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스관 정치'라는 용어가 잘 말해주듯, 현재 냉각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계속된 악재의 연속이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한의 일방적 법적 조치, 남북경협의 축소, 당국자간 소통 부재 등의 상황이 결국 지난해 천안함 및 연평도라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로 이어지면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19]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 내고 나아가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상태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이어나갈 묘안(妙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남북러 당국자간 만남이 빈번하게 이

[19]– 김근식, "최근 한반도 정세: 기대와 현실," 『통일뉴스』, 2011년 9월 28일자 참조.

루어질 것이다.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에 사업 검토를 위한 '남북러 3자 공동위원회'의 발족에 합의한 것이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20] 회담의 수준은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것이고, 회담의 종류 역시 경제분야 회담에서 시작해 각종의 정치·군사분야의 회담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남북러 3국간 경제회담을 시작으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업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합의 단초 제공 및 향후 남북한 통일시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편익 최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1]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남북간 고도의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출발이 어려울 뿐이지, 한번 시작되면 사업의 성격상 최소 20-30년간 지속되는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이다.[22] 그렇기 때문에 3국의 당국자들은 사전협상과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그리고 실제 공급과정에서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합의를 위해 빈번한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가스관 연결은 어디까지나 남북관

---

[20]– 박병수, "남·북·러 가스관 3자위원회 추진,'윈·윈·윈' 될까," 『한겨레신문』, 2011년 8월 24일자.

[21]–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11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11.24), p. 20.

[22]– 전현석, "박근혜, 가스관 한번 깔면 쉽게 못 끊어… 한반도 평화에 도움," 『조선일보』, 2011년 9월 2일자.

계 개선의 단초 역할에 그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스관 사업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가스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23]

다. 에너지 안보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탈냉전 이후 개별 국가차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나아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한 국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24] 이러한 차원에서 탈냉전 이후 개별 국가들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선 다변화,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사활(vital)을 건 자원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25]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러 가스관이 연결된다면 수요자인 한국과 북한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먼저 한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수입선 다변화 및 수송 수단의 다양화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즉, PNG 도입을 통해 기존 해양 일변도의 에너지 수입원을 대륙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0년간 안정적 가스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된다. 북한 역시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해 자체적 가스 수급구조의 구축,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심각한 전력난의 부분적 완화라는 일석삼조

23– 김연철,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전략포럼-남북정상회담 가능한가』, No.4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년 11월), p. 14.

24– 김남일 외,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p. 2.

25–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9.5) 참조.

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공급자인 러시아의 경우는 기존 유럽중심의 수출전략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정책적 변경을 꾀함으로써 누리고자 했던 아시아 수출시장의 확보 및 신규 가스전 개발이라는 몇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3국 모두에게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번 가스관 연결사업은 3국의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협력을 넘어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송전망 연결사업 및 TKR~TSR 연결사업과 함께 움직이는 3종 세트이다.[26] 가스관 연결과정에서 북한 통과 노선은 TKR-TSR, 전력선, 광케이블,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확충은 물론 임가공, 농수산업, 자원개발 등의 3국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즉,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 연결은 에너지협력으로, TKR~TSR 연결은 물류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의 모태도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원자력, 석탄, 철강 공동협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및 나아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갈등'과 '불안정성'의 동북아 질서를 '협력'과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더불어 새로운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창출하는데 유의미한 사업이다.

---

[26]-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북을 거쳐 남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함께 같은 노선을 통과하는 송전선 구축 프로젝트를 남북에 제안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극동지역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발전소>를 꼽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북을 경유해 남쪽으로 이어지는 송전선을 깔아 한반도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동북아 전력망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별취재단, "훈춘-하산-라진 잇는 협력사업 합의," 『민족21』, 127호(2011.10.1).

2. 사업의 추진 현황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의 시작은 1990년대 초반이 출발이었다. 1994년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과 2001년 이르쿠츠크지역의 코빅타 가스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정부가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2007년 동 지역의 가스 자원에 대한 통합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한러간 가스사업과 한국의 러시아 가스도입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인 2008년 3월 한-러 국영 가스회사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9월 29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북한 경유 PNG사업 추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남북러 3국간 가스관 연결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군부의 부정적 반응 및 북핵문제,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됨에 따라 북한 경유 PNG사업은 사실상 중단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24일 북러간 정상회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의사 개진 이후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곧바로 정부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9월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 <러시아 PNG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10월 한러 양국간 '제1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1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로드맵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지면서 동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증대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현황을 크게 두 시기로 분류해, 이

명박 정부 이전 추진현황과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명박 정부 이전(1990년대 초~2007년)

먼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가스관 연결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7]

한국의 러시아 가스 도입사업은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28]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에 입각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일환으로 199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 공동개발의정서'를 체결했다. 1994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동 사업에 대한 공동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가스관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약 14개월간 수행된 타당성조사의 추진 주체는 한국 콘소시엄(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3개 한국기업), 러시아 콘소시엄(가즈프롬, 러시아기업가연맹 등), 사하 콘소시엄(사하네프테가스 등 2개사) 등이었다. 물론 1990년대 사업 시작 초기에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 즉, 1992년 7월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 방문시, 남북러 3국 모두 이 사업에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29]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북한 경유에 따른 사업

27– 이은명,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2009), pp. 3-5 참조.

28– 물론 민간차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던 '89년, 러시아측과 민간 차원의 MOU 작성한 것이 최초였다. KBS, "이명박 대통령, KBS와의 특별대담," 2011년 9월 8일.

29– 김연철,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 p. 14.

의 불확실성, 사하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 사업의 경제성 부족, 가즈프롬의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 수출전략 도입[30] 등의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 다시 재개되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당시 중국과 러시아 양자구도로 추진 중이었던 동시베리아 지역의 이르쿠츠크 PNG 사업은 한국이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한중러 3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한중러 3국은 2000년 11월 이르쿠츠크 PNG 사업의 공동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하고,[31] 2001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타당성조사의 추진 주체는 TNK-BP의 자회사로 코빅타 가스전 보유사인 러시아의 RP,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NPC, 한국가스공사를 주관사로 하는 9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콘소시엄 등이었다. 2001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실시된 타당성조사에서는 '만주리~선양~대련~서해~평택'을 통과하는 4,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연간 각각 중국으로 20bcm(1,400만 톤), 한국으로 10bcm(700만 톤)[32]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33]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동 사업의 승인을 보류하고, 대신 가즈프롬이 주도하는 UGSS를 발표함에 따라 이르쿠츠크 사업은 중단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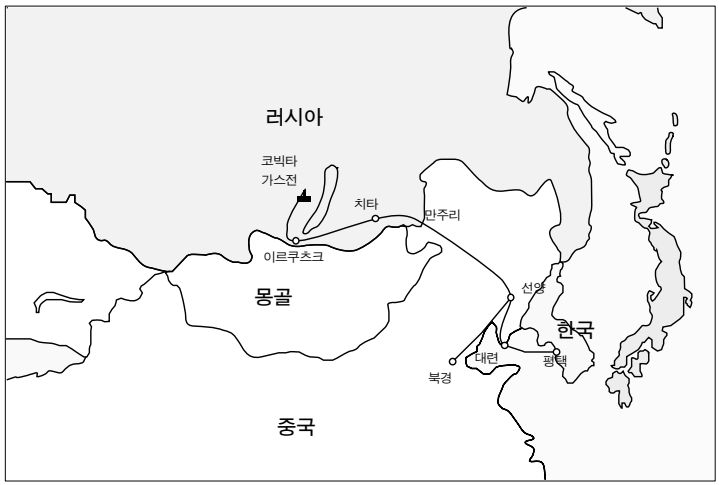
30–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란 러시아 내 여러 가스전들을 하나의 파이프라인 수송망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가스를 국내 및 해외로 공급하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을 말한다.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 34.

31– 이정훈, "이르쿠츠크 PNG사업에 관심 모아져", 『에너지경제신문』, 2000년 11월 4일자.

32– tcm(가스매장량): 1tcm = 7억 3000만톤, bcm(가스생산량): 1bcm = 70만톤.

33– 당시에도 러시아는 '만주통과라인 II'(이르쿠츠크-하얼빈-선양-단동-북한-한국)로서 북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총 길이는 4,115km이고 북한 통과 구간은 약 412km에 해당한다. 성원용 외,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참조.

<그림-1>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노선도



*출처: 정기철, "러시아 가스산업의 여건 변화와 의미 분석," Quarterly Review of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Vol.7 No.4, (2008), p.8 <그림-1> 참조.

2000년 중반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의 러시아 가스공급 사업은 러시아 정부 차원의 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발전과 가즈프롬의 2007년 9월 약 5년간 검토를 거친 UGSS가 동부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34]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내부사정과는 별개로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협력에 관한 논의가 재개된 것은 2003년 5월이었다. 이때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가스산업 분야 협력에 합의했고,

---

[34] 동부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를 개발, 생산, 수송, 공급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통합개발프로그램으로 러시아 산업에너지부(현 에너지부)에 의해 2007년 9월 승인. 동 프로그램의 시행사인 가즈프롬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4개 가스생산 센터(사할린,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중심으로 가스를 개발하여 인근지역에 공급하고, 또한 이들 지역에 단일 가스배관을 건설하여 PNG형태로 한국과 중국으로, 그리고 LNG형태로 아태지역에 수출한다.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 35.

2004년 9월 한러 정상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가스공급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위해 정부간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35] 그리고 2006년 10월 한러 양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정부간 협력협정(Govern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을 러시아 가스도입사업의 정부 위임기관으로 지정했고, 동 협정을 근거로 양사간 가스협력의정서(Gas Agreement)를 체결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8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한국 공급방안에 대한 양사간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등 PNG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36]

나. 이명박 정부 출범~현재까지(2011.11.30)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2008년 9월 한러간 MOU 체결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잠시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적극적 참여의사가 개진되면서 재추진된 것이다.

2008년 8월 '한러 에너지협력 액션플랜' 서명식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방안의 이행상황 평가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한달 뒤인 9월 29일 한러 정상은 모스크바에서 북한 경유 PNG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가즈

35– 2004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울과 평양을 연쇄 방문한 이후, 러시아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천연가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북한을 경유 PNG를 통해 한국에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사기간 약 4년에 총 5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공사기간과 그에 따른 소요자금도 제시했다. 이용권,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러시아의 의도와 실현 가능성?", 『Russia·CIS Focus』 제136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1.11.07).

36– 김세헌, "러시아산 PNG 도입 본 궤도 올라", 『에너지경제신문』, 2007년 12월 12일자.

프롬사간 <남북러 PNG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37] 2009~2010년 한국으로의 PNG 공급노선 공동타당성조사 및 노선 통과국간 협의를 진행하여 동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2010년 말까지 상업협상 완료 및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11년~2014년 기간 중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여 2015년부터 러시아 PNG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했다.[38]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1> 러시아 PNG 도입 예상 일정

연 도	주 요 내 용
2009년~2010년 중반	-한러 공동 타당성조사 수행
2010년 중반~2011년	-가스 도입 상업협상 및 SPA 체결
2011년~2012년	-파이낸싱,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2013년~2015년	-배관 및 공급설비 건설 완료
2015년 말	-시운전 및 공급 개시

* 출처: 이은명(2009), p. 6 <표 2-1> 참조.

러시아 PNG 공급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에서 2017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연간 10bcm(한국 가스소비의 약 27%에 해당)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공동으로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단지 및 LNG 액화

37- 지식경제부,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08. 9. 29.
38- 이은명,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p. 6.

플랜트를 건설, 공동운영 및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공동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39] 또한 PNG 도입방식과 병행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LNG 또는 CNG(Compressed Natural Gas)로[40] 도입하는 방식도 동시에 검토한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사는 공동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한국 공급방식(PNG, LNG, CNG)에 대한 예비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2011년부터 북한이 동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경되기에 이른다. 2011년 6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김용재가 모스크바의 가즈프롬 회장 알렉세이 밀러(Alexi Miller)와의 만남에서 북한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전달했고, 한달 후인 7월 초 가즈프롬의 부사장 알렉산드로 아나넨코프(Alexander Ananenkov)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부총리와 원유공업상 등과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8월 1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경유 한국 공급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북한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41] 8월 24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시베리아 동부 군사기지 울란우데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39– 30년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물량은 900억 달러, 러시아 극동지역에 건설하는 석유화학 및 LNG 액화 플랜트 건설에 90억 달러, 북한 경유 가스관 부설에 30억 달러로 총 1,020억 달러가 소요되는 메가톤급 에너지 협력 사업이다. 홍인표, "남북 단절에 러 천연가스 '북 경유'도 무산", 『경향신문』, 2010년 9월 6일자.

40– CNG(Compressed Natural Gas)는 운반의 용이성을 위해 천연가스를 압축한 것으로써, 경유(Diesel)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 등의 대형 차량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

41– 백 훈,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전망," 『서울평화포럼: 남북러 가스관 연결 – 과제와 전망』, 2011년 10월 11일 세미나 발표문, p. 15.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다.[42] 여기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메데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 한국을 포함하는 3자(tripartite)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정부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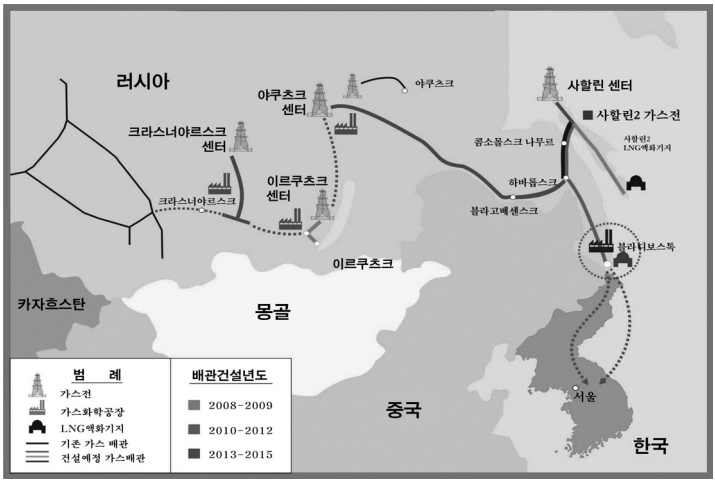
동시에 2011년 9월부터 한러간 협력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월 10일 한러 외무장관 회담 이후 9월 16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와 가즈프롬의 회장 밀러가 만나 <남북러 PNG사업의 장기 로드맵>에 대한 합의·서명을 마쳤으며, 10월 26일에는 한러 양국 장관급 회담인 '제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1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회 한러대화(KRD) 포럼에서 가즈프롬 니콜라이 두빅 법무실장은 9월 15일 합의된 양해각서의 내용을 설명했고, 다음날인 11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로드맵의 내용은 먼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가스공급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2013년 9월 러시아의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에 착수, 2016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44]

42- 여인곤,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온라인 시리즈』, (통일연구원) CO.11-20, 2011년 8월 25일, p. 1.

43- 한종만, "김정일 러시아 방문 이후, 북·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민족화해』(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통권 52호, 09-10월호, 2011년, p. 28.

44- 한종우, "한·러 정상, '北경유 가스관 긴밀협력'," 『연합뉴스』, 2011년 11월 2일자.

<그림-2> 러시아 천연가스 예상 노선도



*출처: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남은 주요 추진절차는 도입협상단계(가스매매계약 체결), 검토단계(공급안정보장방안 검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투자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북한의 제반 법·제도 검토, 가스수송계약 체결 등), 건설단계(설계, 자재조달 및 시공, 시운전) 등이 남아 있다. 우선 '도입협상단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가스 가격, 물량, 계약기간, 인도지점, 품질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다음 '검토단계'에서는 투자보장, 안정적인 가스수급 보장, 배관망의 안정적 건설·운영 등을 위해 사업 당사간(정부, 기업) 공급안정보장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45], Host Government Agreement: HGA[46])과 배관운영

45– IGA(Intergovernmental Agreement)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측면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위해 당사국 정부간 프로젝트 보장 협정이다.

46– HGA(Host Government Agreement)는 배관 통과국에서의 가스공급 중단위험을 줄이고, 배관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배관운영회사와 통과국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협정이다.

회사와 가즈프롬간 가스수송계약(Gas Transportation Agreement: GTA)[47] 등이 체결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외국기업과의 PNG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세제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시 북한 당국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연계된 사업의 경우 북한의 높은 국가위험(country risk)으로 인해 민간금융기관 주도의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계, 시공, 시운전 등의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 2017년 1월부터 PNG가 공급된다.[48]

<표-2> 향후 추진절차와 단계별 주요사업

단 계	단계별 사업
도입협상단계	-가스매매계약 체결 ·가스 가격, 물량, 계약기간, 인도지점, 품질 조건 등 ·투자보장, 안정적인 가스수급 보장, 배관망의 안정적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IGA, HGA, GTA등 체결
검토단계	-공급안정보장방안 검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투자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북한의 제반 법·제도 검토 -가스수송계약 체결 등
건설단계	-설계 -자재조달 및 시공 -시운전 실시

* 출처: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을 참조하여 재구성.

47- GTA(Gas Transportation Agreement)는 가스 수송료 및 수송조건,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배관운영회사와 shipper간에 체결함. GTA는 가스의 인도지점에 따라 체결 당사자가 달라진다.

48- 위의 글, pp. 36-37.

Ⅲ.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

본 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관련국인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에게 어떠한 정치·경제·전략적 기대이익과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한국은 각종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와 그에 따른 수송비 절감, 향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한러간 가스관 협력을 넘어선 각종의 경제협력 및 남북러 3국간 제도적 협력 틀 공고화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주도적 기여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가. 수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우선 한국은 이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기존 해양 일변도의 에너지 수입원을 대륙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해외 가스의존도는 중동지역 44.5%, 동남아지역 31.3%, 러시아 8.8%[49]의 비중이다. 한국의 연간 가스소비 규모는 2010년에 430억㎥(약 3,200만 톤)로, 가장 큰 수입국인 카타르, 오만, 예맨, 이집트 등 중

[49] 2005년 7월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사업자와 LNG 장기 매매계약(연간 150만 톤씩)을 체결하였고, 첫 번째 공급은 2009년 4월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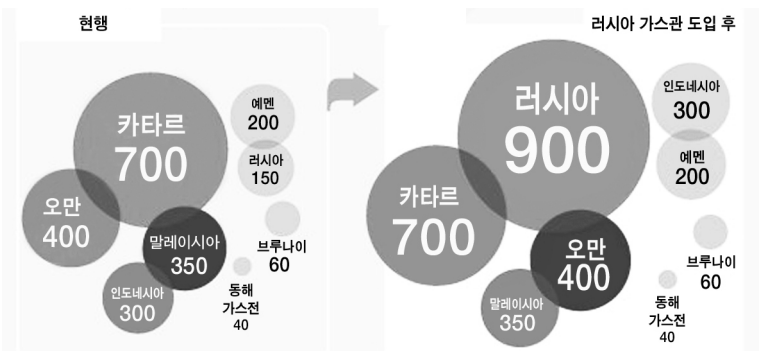
동국가로부터의 가스 수입량은 1,430만 톤으로 그 비중은 45%에 이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동아시아(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할린, 브루나이 등)와 호주로부터 나머지를 수입하고 있다. 만약 남북러 가스관이 연결되어 2017년부터 PNG로 가스가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러시아의 가스의존도는 27.3%(총 가스수입량 3,292만 톤, 러시아 가스 도입량 900만 톤)로 증대되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30년간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표-3> 국내 천연가스 도입선별 비중

	2008년	2010년
중동	49.3%	44.5%
동남아	37.0%	31.3%
러시아	0.0%	8.8%
기타	13.7%	15.4%
합계	2,794만 톤	3,182만 톤

*주: 중동 및 동남아산 가스 도입 비중: '08년 86.3%, '10년 75.8%
**출처: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p. 61 도표 참조.

<그림-3>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의존도



*주: 장기계약 물량 기준(단위: 만톤)
**출처: 『경향신문』, 2011년 9월 15일자.

남북러 가스관의 공급지인 사할린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1,830km,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북한 국경까지는 890km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이 공동 조사한 바에 의하면, PNG, LNG, CNG 중 PNG로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0] 한국은 PNG의 도입으로 향후 장기 천연가스 도입 소요 물량을 확보하는데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 12월 발표한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의하면, 천연가스 도입소요량이 2015년에 1,220만 톤, 2017년에 1,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부터 러시아 PNG(750만 톤)가 도입된다면 도입소요량의 상당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51] 세계 천연가스 수급상황과 시장구도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시점은 PNG 도입을 위한 조건 및 가격협상의 호기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 가스 부존국/수출국인 러시아와 국내 및 제3국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한국의 자주개발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은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될 러시아 가스자원을 이용한 국경간 PNG사업으로서, 한국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막대한 양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52]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향후 커다란 규

50– PNG의 특징은 사업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초기 투자비가 크게 들지만, 건설된 이후 운영비는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다. 즉, PNG사업의 투자비에는 배관자재비, 배관시공비, 주요 설비 건설비, 그리고 통과국에 대한 토지임대비, 환경비, 세금, 보상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09년 6월-2010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이루어진 공동 경제성조사에서는 총투자비에 북한에 지급하는 비용(토지임대비, 환경비, 세금,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p. 38-39.

51– 한국은 2015~16년 기간의 LNG 장기계약물량(564만톤)을 최근 호주에서 확보하여 러시아 PNG도입이 긴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호주와의 장기계약에서 제3국 판매조항을 포함시켰다.

모의 천연가스 추가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동부 연안지역에서 잦은 가스공급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러시아 가스관 선점은 일본과 중국을 바쁘게 할 것이다.

나. 수송수단 다양화에 따른 수송비 절감 효과

다음으로 수송수단 다양화에 따른 가스 수송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53] 2008년 한국의 LNG 수입 규모는 2,725만 8,657톤(약 363억㎥)으로, 1톤 당 평균 가스 수입가격은 722.6달러 혹은 1,000㎥ 당 545.5달러로 총 가스 수입규모는 198억 달러였다.[54] 정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은 2009년 기준 2,591만 7000톤에서 2010년 3,184만 2,000톤(잠정)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 수입 독점기업인 한국가스공사(LNG 수입의 97%)의 연간 LNG구매 물량은 3,200만 톤으로 도쿄가스(1,080만 톤), 대만석유공사(770만 톤)보다 앞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55]

새로운 가스전 개발은 적은 반면에, 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LNG 시장은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LNG를 수입하는 동아

52– 가즈프롬은 이르크추크 센터의 가스 예상매장량을 2.0tcm, 야쿠츠크 센터의 예상매장량 1.24tcm, 사할린센터의 예상매장량 2.09tcm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53–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 18.

54– 같은 해 일본의 LNG 1톤 당 평균 수입가스 가격은 650.01달러로 한국이 일본과 같은 단가로 LNG를 수입했다면 20억 8,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혁주,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중앙일보』2009년 6월 3일자.

55– LNG 저장용량 면에서도 한국가스공사(712만㎘)는 세계 1위이며, 그 뒤를 이어 도쿄가스(336만㎘), 대만석유공사(117만㎘)순이다. 현재 이와 같은 구매력으로 인해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LNG소비국인 일본에 비해 6% 가량 저렴한 가격에 LNG를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년간 가스공급 중단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경호, "한일 LNG 우정도 통했다,"『아시아경제』2011년 3월 17일자.

시아국가(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등)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의 LNG 수요의 증가, 일본 쓰나미 여파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과 장기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도 에너지 위기 대비책으로서 러시아산 가스도입은 이점이 있다. 현재 석유와는 달리 천연가스는 현물시장(spot market)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에서의 가스 수요의 증가와 사용,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및 북한지역에서의 가스 사용 증가는 한국에서의 황사 감소와 깨끗한 대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통해 PNG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할 경우, 기존 LNG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PNG를 통한 가스 도입은 액화 비용이 들지 않고 대규모 저장시설도 필요 없기 때문에, LNG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NG는 중·단거리에서 LNG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56]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의 PNG 타당성 조사 결과, 약 48억 달러(25년 기준)로 북한 통관비 연간 1억 5000만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LNG 수입가격 226억 달러의 1/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NG의 경우 LNG보다 약 30~70% 싼 가격에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의 1,000㎥당 LNG 수입가격은 평균 413~452 달러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에 제시하고 있는 PNG 가격이 1,000㎥ 당 350 달러란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 러시아산 PNG 가격을 지금의 수입가격보다 18~29%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1tcm 당 200 달러이면 연간 19억

56–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 37.

1,630만 달러, 1tcm 당 300 달러이면 연간 9억 1,88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57] 한국의 LNG 연간 가스 물량 430억㎥의 가격은 177억 5,990만~194억 3,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러시아산 PNG 100억㎥의 가격은 35억 달러로, 그 차액은 6억 3,000만~10억 2,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가스관이 건설되어 30년간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연간 약10억 달러, 총 189~306억 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58]

<표-4> LNG와 PNG의 가격 비교

도입 방식	유지보수비+건설비	수송비(1MMbut의 경우)
LNG	226억 달러 (26조 6,454억 원)	0.94 달러(1,110원)
PNG	47억9,000만 달러 (5조 6474억 원)	0.31 달러(365원)

다. 각종의 경제적 기대 이익과 파급효과

다음으로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해 각종 경제협력으로의 파급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송비 절감이라는 직접적 경제효과 이외에 한러간 가스관 협력에 이은 에너지 협력과 이를 넘어선 각종 경제협력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7- 이준삼, "가스관 北통과료 천연가스로 지불해야," 『연합뉴스』, 2011년 10월 11일자.

58- 이 편익치는 한국의 LNG 수입가격의 불변과 북한 통과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가정(ceteris paribus)한 것이다.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 17.

한국은 가스관 연결 이외에 러시아 내 추가적인 에너지사업(유·가스전 개발사업, LNG생산공장·가스화학공장 건설 등)의 참여기회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규 가스전의 개발이 가스파이프는 물론이고, 가스화학 및 정제에 필요한 설비 생산, 시추선(試錐船), 해상부유식 석유·가스설비(FPSO), 쇄빙유조선 및 가스운반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구매라는 차원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대이익이다. 이를 위해 이런 일련의 상호보완적 산업 프로젝트 외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러시아 가스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가즈프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가스 안정성의 제고, 신규 가스전 사업 참여, 새로운 산업분야와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독일은 1998년 러시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시기에 가즈프롬사의 지분을 매입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가스공급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야말 및 네네츠 지역의 신규 가스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근 EU가 개정한 자원분야의 독점금지법안 때문에 생산·운송·분배·판매를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가즈프롬사의 지분을 처분하기 전까지 6.8%의 지분을 보유, 이를 이용하여 가즈프롬에 상임이사를 파견하고 가스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러시아의 가스공급 안정성 의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가즈프롬의 지분을 확보하고,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59]

[59]– 권원순, "한·러 가스관사업과 동북아 경제," 『창비주간논평』, 2011년 11월 23일자.

한편 이번 사업과정에서 북한 경유 노선으로 남북한과 러시아 등 3국이 동북아 물류협력벨트로 검토해 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트는 공사 대금을 제공하기로 한 러시아 투자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중단됐다. 그 외에도 한러간 전력선, 광케이블,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확충은 물론 임가공, 농수산업, 자원개발 등의 3각 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모태도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원자력, 석탄, 철강 공동협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UNDP 광역 두만강개발프로젝트는 물론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에너지 공동체나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창설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60]

더불어 가스관 사업뿐 아니라 러시아의 풍부한 잠재적 에너지 및 자원시장 개발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 영역에서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므로, 제조업은 물론 항공우주, IT, 원자력, 금속, 화학분야로 투자의 저변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 남북관계 개선 및 정치적 파급효과

한국에게 있어 이번 가스관 연결사업은 경제적 효과도 효과지만,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효과'에 있다.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선 다변화 및 안정적

60–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 19.

공급망 확보, 이를 통한 가격 절감 효과 등의 경제적 유인(誘因)보다, 지난 4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 사건에 이은 금강산 관광 중단, 그해 12월 1일에 터진 북한의 일방적 법적 행동인 12.1 조치, 그로 인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사업 중단, 계속된 남북한 당국자간 소통 부재에 이은 2009년 11월 대청 해전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 및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남북관계의 악재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61]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화해국면으로 전환시킬 어떠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관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남북, 한러, 북러, 또 남북러간에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과 대화가 예상된다.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남북간에 관계개선과 관련된 일정한 교감이 형성되었다는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화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잦은 만남은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해 남북한 냉각국면을 교류 및 화해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연동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문제, 그리고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시키는 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성

61– 이윤식,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응방안", 『2011년 통일부 신진학자 정책연구과제 자료집』, 2011년 11월 17일 발표문 Ch.5 참조.

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분명 전제되어야 할 첫 번째 단추는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개선이며, 이를 통한 PNG사업의 성공도 가능할 수 있다.

2. 북한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이 노릴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으로 국경통과 수수료와 그로 인한 각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구소련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호기(好機)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에게 가스관 연결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경제지원 등의 요구 가능성을 증대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국내적으로 대내외적 위기 탈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62]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도로 인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과도화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국경통과 수입 및 러시아 채무탕감 문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연간 1억~1억 5,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국경 통관 수수료이다.[63] 가스관 연결시 배관이 북한 영토를 통과하기 때문에 북한은 매년 일정규모의 통관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이 배관 운영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배당수익도 동시에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스관 건설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의 참여와 가스관 운영 컨소시엄 참

62–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pp. 62-63.

63– 역대 최대 남북경협 사업이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합쳐 연 9,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큰 규모이다.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1년 12월 5일).

여를 통해 경화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64] 더불어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에 중소규모의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북한 전력난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북한은 이를 통해 가스 수급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가 직면한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 통관료 1억 5,000만 달러 혹은 에너지(가스, 전력, 석유 등)와 식량지원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북한체제 내부의 불안정을 다소 완화시킬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65]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가스통과에 대한 국경통과료 수입 이외에 북한 자체 천연가스 수급구조 구축,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러시아와 남한에 대해 국경통과료와 배관건설 참여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관 공사를 위해 북-러간 철도망 확장 및 송전망 연결이 기대되며, 북한은 이를 통해 배관 통과 지역에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북·러간 실무회담에서 러시아는 남북러 철도연결, 가스관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북한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66] 더불어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통해 자원, 관광, 물류 분야로의 발전은 물론 대북한 해외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스관 연결사업이 실현될 경우 북한에게 예상되는 또 다른 효과는 소련 채무(22억 소비에트 루블: 당시공식환율 1소비에트 루

64-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 16.

65- 김정훈,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한러관계를 중심으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11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11.24), p. 58.

66-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 40.

블 = 1.724달러), 이자를 고려하면 약 110억 달러의 채무 탕감 가능성이다.[67] 현재 북한은 이 부채를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해 각종의 경제협력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고, 실제 사업이 시작된다면 경제협력의 대가가 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소련시절의 차관을 현 시세로 환전하는데 양국간 이견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북한은 대러시아 부채의 이자 유예는 물론 약 90%를 탕감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8] 특히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면서 채무문제는 경제협력을 이루어가는 조건으로 탕감 받은 것으로 보인다.[69]

나. 대내적 위기 탈출 기회 마련 및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과도화 방지

북한이 이번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러시아로 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지원과 함께 대내외적인 위기 탈출의 기회 마련, 그리고 과도한 대중 의존도로부터의 탈출 등이다.[70]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국내정치적으로 3대 세습을 위한 지지를 얻어 2012년에 시작되는 '강성대국 원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

67– 한종만, "김정일 러시아 방문 이후, 북.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p. 28.

68– Stephan M. Haggard, "More on the Pipeline",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Sep. 20, 2011. http://www.piie.com/blogs/nk/?p=2887 (검색일: 2011년 11월 1일).

69– 『로동신문』, 2011년 10월 12일자.

70– 신범식, "러북남 가스관 프로젝트와 러북 및 한러 정상회담", 『EAI 논평』제22호 (2011.10.27), p. 5 참조

국에 편향되었던 정책을 재조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실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71]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의존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2010년부터 심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2010년 대중 수출·수입 현황 및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2]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0년 동기간(3억 5,000만 달러)보다 202% 증가한 10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액은 14억 5,000만 달러로 대중 무역적자는 5억 9,000만 달러에서 3억 9,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1위 석탄, 2위 철광석, 3위 비합금선철, 4위 아연 등이고, 이 중 1위인 석탄 수출은 총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약 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탈출구로 중국과 나진·선봉, 황금평 공동개발 및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북 식량지원 약속을 받았다. 러시아는 올해 초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를 500만 달러까지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방러 직전에 밀가루 5만 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밀가루의 국제시세가 1톤당 335 달러(2011년 2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김 위원장의 방러를 위해 2000만 달러가 넘는 식량원조를 제공한 셈이다. 그리고 북한은 나선 경제특구의 발전

71– 이영형,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11.24), p. 37.

72– 『연합뉴스』, 2011년 7월 29일자.

을 위해 나진항의 국제항 건설에 대한 러시아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러시아에게 나진항 3부두의 49년 임차와, 항만 터미널 건설의 하산-나진 52km 철도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73]

3. 러시아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 이익, 즉 경제적 이익과 정치·전략적 효과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유럽지역에서 극동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한중일 시장 확보 차원과 중국과 4년 가까이 진행 중인 가스관 연결사업에서의 협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전략적 효과 증대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관계 회복,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 나아가 역내 영향력 행사를 위한 포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수출지역 다변화와 대중 협상력 제고 차원

러시아는 최근 신규 매장지 개발에 대한 수요 증대, 유럽의 러시아 가스의존도 감소노력, 북미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기존 유럽중심의 천연가스 수출전략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극동 지역으로 관심을 돌린 상태이다. 즉, 동부 시베리아의 경제적 부흥과 유럽에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사할린-3' 같은 대형 가스전을 개발

---

[73] KDI,『북한경제리뷰』, 2011년 9월호, p. 106; 박성국, "러, 김정일 방문 맞춰 밀가루 5만톤 지원,"『데일리 NK』, 2011년 8월 21일자.

해온 러시아에게 한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즈프롬이 강점을 갖고 있는 PNG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해도 가스 배관 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아태지역에서 PNG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최적의 시장이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관련 플랜트 및 액화천연가스 시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러시아 기업들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선박이 아닌 PNG로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수출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고,[74] 동시에 동부 시베리아의 소규모 가스전까지 연결해 수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에게 이번 사업은 매우 매력적인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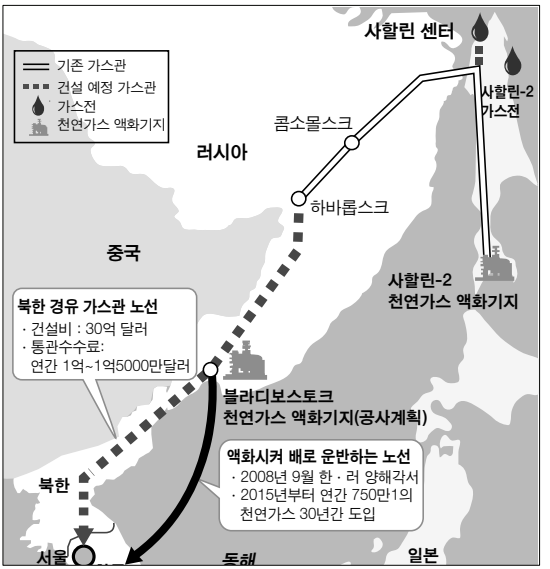
러시아는 가스·원유 등 에너지 자원 수출에 따른 수입이 전체 재정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유럽가스 시장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고, 앞으로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시아 가스시장은 가즈프롬에게 있어서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시장인 것이다. 세계 주요 지역의 최근 5년간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7.17~13.92달러이며, 아시아 LNG 수입가격은 유럽 PNG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11년 상반기에 러시아 PNG의 대유럽 수출은 mmbtu당 10달러, 아시아 LNG 수입은 11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다.[75] 러시아 가스의 국내 및 해외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국영기업인

74–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LNG 형태로 수출해오던 것을 PNG 방식으로 바꾸면 가스 액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정은 외, "가스관이 남북관계 왜 더 도그," 『동아일보』, 2011년 9월 3일자.

75– 에너지경제연구원, FACTs Global Energy, Gas Matters 각호 참조.

가즈프롬이 독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가즈프롬은 자국 및 인접국에 가스 수송인프라를 보유하고 가스수입국의 가스 및 발전 부문의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 안정성과 외화 수익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의 독점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4> 남북러 가스관 연결 현황



*출처: 『동아일보』, 2011년 11월 13일자 참조.

무엇보다 가즈프롬은 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아 지역, 특히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가스수요 증대를 예상하여 러시아 동부지역 내 자원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셰일가스 생산 증가는 미국 및 세계 가스수급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6] 이에 따라 북미지역 천연가스가

동북아 지역으로 공급되고, 서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가스 점유율이 감소되면, 러시아에 있어서 아시아 가스시장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동부지역 내 가스전들은 아태시장, 특히 동북아 3국과 인도 등을 겨냥해서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남북러 PNG사업의 추진을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가스도입 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2008년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PNG를 2015년부터 30년간 매년 68bcm(약 5,000만 LNG환산 톤)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가즈프롬과 CNPC간에 도입가격을 4년째 협의 중에 있다. 양측간 가격협상은 계속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금년 6월말 1000㎥당 350달러(mmbtu당 9.3달러 수준)내외의 가격을 제시한 반면, 중국은 1000㎥당 235달러(mmbtu당 6.2달러 수준) 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대규모 장기 PNG 도입계약을 성사시켰고,[77]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으로부터도 P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한국과의 가스가격 협상이 중국과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6– 동 사업은 2008년 7월 가즈프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말에 착공되어 2011년 9월 초에 완공되었다. 총 연장은 1,830㎞, 가스공급지는 사할린-3 프로젝트(키린스키 광구, 유즈노 키린스키 광구), 초기 수송량은 6bcm, 향후 30bcm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연해주(Primorsky Krai)에 건설예정인 LNG 플랜트와 석유화학단지에 가스가 공급될 것이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남 북 러 가스관과 연결될 것이다.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 36.

77– 에너지경제연구원, FACTs Global Energy, Gas Matters 각호 참조.

나. 북한과의 관계 회복

러시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멀게는 탈냉전 이후 냉랭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가까이는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서먹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대북관계 개선의 노력 이유는 무엇보다 내년도에 예정된 국내정치 일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는 국내정치 일정상 내년 3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외정책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바, 아태지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목표가 바로 북한 이슈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대외정책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년 9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담이다. 메드베데프는 집권 이후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북한문제이고 그것을 풀 열쇠가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극동 시베리아 문제와 대외적으로 남북문제가 연결된 셈이다. 아태전략을 통한 동북아 정세에 러시아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과, 경제 문제를 연결하여 남북한 균형외교에서 연계외교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를 단순히 조정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얘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러시아는 북한을 설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관철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역시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북러 경제협력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은 한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그러한 종류의 3자간 사업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술적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78] 이는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에 대한 신뢰회복과 에너지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 외에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전적인 경제 의존 상황 개선의 의지로 해석되고, 러시아의 경우도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북러간 대표적인 협력은 하산과 나진을 잇는 철도의 연결과 식량지원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첫 단계로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의 나진을 잇는 50km의 노후화 된 철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나진-하산 철도는 동북아로 연결되는 러시아의 수송로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북아정책 노선에 부응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이 철로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시범열차 운행 행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격적인 북·러 관계 정상화와 양국간의 협력은 북한의 러시아 관련 보도 논조에도 반영되고 있다.[79] 러시아는 올해 초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를 500만 달러까지 늘렸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 방러 직전에 밀가루 5만 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밀가루의 국제시세가 2011년 2월말 기준 톤당 335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를 위해 러시아는 2,000만 달러가 넘는 식량원조를 제공한 셈이다.[80]

78– 『조선중앙통신』, 2011년 8월 24일자.

79– 김정일의 방러를 "북·러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사변"이자,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호평하였다. 『로동신문』, 2011년 10월 12일자.

80– 박성국, "러, 김정일 방문 맞춰 밀가루 5만톤 지원," 『데일리 NK』, 2011년 8월 21일자.

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 및 역내 영향력 제고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사업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러시아는 이번 사업에서 경제적 목적 이외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가스관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 1,122km의 가스관 중 700km는 북한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러시아에게 있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은 1896년 고종의 주한 러시아 공사관 피신(아관파천) 직후에 극에 달했다가,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지면서 급속히 소멸됐다. 하지만 1945년 8월 소련군의 북한지역 진주로 한반도 북쪽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고, 그 이후에도 다소의 부침(浮沈)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시켜 왔다.[81] 탈냉전 직후 국내문제로 인해 대북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하게 약화되었지만, 2000년 푸틴의 등장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고, 현재는 나진항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진-하산간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경유 PNG 사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동시에 회복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넘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관에 이은 송전

81– 평화연구원, "급변하는 한반도정세,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현안진단』, 제32호(2011.08.30), p. 3.

망 및 철도연결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남북한과 러시아가 기대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크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업이다.[82] 1,000km의 가스관 중 700km는 북한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정권교체기를 맞아 러시아는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대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남북한과의 철도, 에너지(전력과 가스 등), 물류, 항만 등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제어하면서, 동시에 명실 공히 에너지대국, 물류대국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의도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철도, 석유, 가스, 에너지를 포함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에너지 및 물류 통합시스템' 구축 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가 생각하는 동북아 역내 평화메커니즘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안정과 협력을 필요하다.[83]

82– 평화연구원, 위의 글, p. 3.
83–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 16 참조.

IV.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쟁점 및 제약요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각종 정치·경제적 기대이익 및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쟁점과 제약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한축에서는 북한 변수로 대변되는 정치적 제약요인, 한국과 러시아간 가스관 공급가격 협상 및 건설비용 협상과 관련된 경제적 제약요인, PNG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인한 제약요인 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축에서는 가스관 협상과정·건설과정·실제 공급과정에서의 제약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된 정치, 경제, 기술적 제약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변수로 인한 정치적 제약요인

본 사업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PNG가 북한을 경유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변수이다. 남북관계 악화 후 북한에 의한 파이프라인 차단 및 가스의 무단유용 가능성, 통과 수수료에 대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 가스관 연결에 대한 북한 내 군부의 집단반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 대한 중대한 위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 경유 PNG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북한 통과 리스크

본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 통과 리스크'에 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가스관을 건설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한이 이를 임의로 차단(파이프라인 중간에 설치되는 가압소)하거나 파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급격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며, 동시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대남 사업에서 한국이 자신들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스관을 잠갔다 열었다 하면서 에너지를 무기로 삼을 것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에게 대남 전략적 레버리지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경유 가스관에서 얼마든지 가스를 절취해 또 다른 남북관계의 갈등요인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스관 연결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남 정치적 영향력 강화, 이른바 '파이프라인 외교'(pipline diplomacy)만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84]

실제로 국제사회의 가스 관련 분쟁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장난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31일과 2009년 1월 1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통과료와 배관이용료로 인한 가스분쟁의 여파로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운송되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되어 유럽이 가스대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85] 또한, 지난 2005년에 남미에서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경로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남미의 볼리비아는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량을 발견하면서 가스 수출을 위한 항만 확보를 둘러싸고 칠레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웃 국가인 칠레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볼리비아는 칠레에 천연가스를 공급한 아르헨티나와 첨예한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86]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례 역

84– Smith Keith, "Russia-Europe Energy Relations: Implications for U.S. Policy," *A CSIS Report,* 2010.

85– Leonid Grigoriev and Maria Belova, "EU-Russia gas relations," *PEI Electronic Publications,* Aug. 2009, p. 76.

86– Anouk Honore, *Argentina: 2004 Gas Crisis*, (UK;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04), pp. 35-38.

시 에너지 관련 분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는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기업들과 협력해 유전을 개발하고 채굴된 원유를 기존의 송유관을 통해 수송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87] 이러한 사례들은 배관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문제, 국경통과료와 배관이용료에 대한 문제, 통과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제 등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들이다.

<표-5> 유럽 주요 가스관 프로젝트의 갈등 구조

	Nord Stream	South Stream	Nabucco
루트	러시아(Vyborg)~발틱해 저~독일(Greifswald)	러시아(Dzhubga)~흑해해저~이태리, 오스트리아	터키(Ahiboz)~오스트리아(Baumgarten)
관련 국가	러시아, 독일	러시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태리, 세르비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개요	연장: 1,224km 용량: 55bcm/년	연장: 900km	연장: 4,042km
일정	1차: 2011년 완공 2차: 2012년 완공	2015년 완공	2015년 완공
운영 주체	Nord Stream AG	South Stream AG	Nabucco Gas Pipeline
비고	러시아 주도	러시아 주도	미국 주도

* 백 훈,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전망," p. 28 <표-5> 참조.

87- 백 훈,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전망," pp. 24-25.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은 공급국인 러시아와 통과국인 북한의 한반도와 대남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파이프라인의 총 구간 1,122km 중 북한 통과 구간이 740km로 전체 구간의 60%가 넘는다.[88] 과거 남북한 사례로 추정해볼 때,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악화된다면 북한은 분명 가스관을 막거나 파괴시켜 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남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북한 통과 리스크'라는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나. 군부의 반발과 수수료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

본 사업의 또 다른 제약요인은 북한 내 군부의 반발과 통관 수수료의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 문제이다. 실제 미국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타임스'는 가즈프롬사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으로부터 가스관 문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에게 있어 이번 사업은 가스관의 통과료로 매년 1억 5,0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가스관 통과료로 현금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과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실익 이외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망외(望外)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사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88– 총 구간 1,122km 중 러시아 구간(블라디보스토크~나진)이 150km, 북한 구간(나진~휴전선)이 740km, 한국 구간(휴전선~평택) 252km임.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여전하다. 또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데, 1억 달러 때문에 핵을 포기할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북한 당국자와 언론매체가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기대를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89] 북한 내부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타당성조사사업 한국 참여에 관한 3자간 협정안>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중러 사업주체간 5차 실무회의에서 가서명되었다. 당시에도 북한 경유 PNG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90] 이 역시 북한 내 군부의 반발로 무산되어 진로를 선회했었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르쿠츠크~몽골~중국(북경, 산둥반도)~서해해저~한국'을 연결하는 4,115km의 가스관을 건설하고, 빠르면 2008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PNG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가스관 사업에 대한 북한 군부 반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군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가스관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기술적·환경적·합리적 고려를 통해 지역을 결정해야 할텐데, 분명 그 가운데 군부의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노출하면 안되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민감한 지역을 피해 경로를 선택하고 배관을 매

89- 『로동신문』, 2011년 8월 25일자; 『로동신문』, 2011년 10월 14일자.

90- '만주통과라인 II'(이르쿠츠크-하얼빈-선양-단동-북한-한국)로서 북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총 길이는 4,115km이고 북한 통과 구간은 약 412km에 해당한다. 성원용 외,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참조.

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긍정론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 군부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군사시설의 노출을 우회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북한 군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진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시도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더불어 현재 미·북 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북한의 안전보장문제, 또 후계체제에서 완전한 권력 이양과 체제 유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군사력밖에 없다는 것이 군부의 생각이다. 따라서 가스관이 지하를 뚫고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있어 여러 차원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PNG가 북한을 통과하면 전 지역이 요새화된 북한으로서는 이를 매우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다.[91]

한편, 이 사업의 가장 큰 위험성은 통과 수수료의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과 이로 인한 체제 및 정권 생존의 도움 가능성이다.[92] 가스관 통과료의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 북한 지도층의 통치자금으로의 전용 가능성, 특히 군부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지도층의 호화 사치품으로의 전용 문제도 이 사업 원활화를 막는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와 연관된 사항이며, 가스, 석유, 전력 등의 현물이나 바터거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나, 상품별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가격 혹은 가치평가의 협의 과정의 필

91– 노영민, "북 군부, 가스관 사업에 부정적," 『자유아시아 방송』, 2011년 10월 6일자.

92– 장용석, "남북러 가스관 사업, 안보위해 요인 해결이 먼저," 『머니투데이』, 2011년 10월 19일자.

요성 등 많은 거래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은 가스관 경유에 따른 막대한 통과세 수입을 통해 정권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핵개발이나 미사일 능력 증대 등의 군비확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북핵문제와의 연관성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북핵문제와의 연관성 여부이다.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절대 수단으로 생각하는 북한과 핵을 기필코 포기하게 만들려는 미국, 한국 등 관련국들 사이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재발할 경우, 북한은 남한에 대해 가스관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참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물론 러시아는 자신들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군사물자를 제공하는 국가라면 통제의 수단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남한이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듯이 러시아 역시 남한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93]

이는 과거 경수로사업의 사례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다. 경수로사업은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합의(1994.10.21)에 의해 시작된 사업으

93– 홍우택,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셈 방식,” 『온라인 시리즈』, CO.11-23, (서울: 통일연구원), 2011년 9월 6일, p. 2.

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남한, 미국, 일본, EU 등이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500M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2월 시작된 이 사업은 2년 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2차 북핵위기가 제기되면서 중단되어 버렸다.[94] 요컨대 북한은 남한 외에 다른 외국이 참여했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향해 신예 전투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불가측성은 분명 이번 가스관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95]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남한 투자자산 몰수,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및 6자회담의 보이콧 등으로 남북관계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교역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역시 논란거리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식량 등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5.24 대북조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인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도 역시 위배되는 것이다. 굳이 '5.24 조치'나 '안보리결의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중단하지 않았고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가스관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며, "유엔 대북제재

94– 인교준, "KEDO 경수로공사 잠정중단 결정과 전망," 『연합뉴스』, 2003년 11월 5일자.

95– 노영민(2011.10.6).

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WMD)"라면서, "UN 제재 내용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96]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2. 경제적 제약요인

가스관 사업의 가장 큰 추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 역시 제고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한 북한 경유 남북러 가스관 협력이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급 가격협상과 건설 비용문제 때문이다. 북한 경유 러시아산 PNG를 한국에 얼마에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총 1,122km 중 북한지역에 해당하는 740km의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해결과제이다.[97] 이와 함께 북한을 경유할 시에 얼마의 통관료를 제시하고 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가스 공급가격 그리고 가스관 건설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므로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해결 과제인 가스관 공급가격에 대한 협상 및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 그리고 공급가의 변동 가능성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경제적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다.

96- 윤성원, "정부 '남북러 가스관 대북제재 대상 포함 안돼," 『뉴시스』, 2011년 9월 5일자.

97- 이와 관련, 지난 11월 30일 러시아 외무부 특명대사 알랙산드로 티모닌은 현지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즈프롬이 북한구간 700km 가스관 건설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철, "러, 북한 구간 가스관 건설 비용 모두 부담할 것", 『연합뉴스』, 2011년 11월 30일자.

가. 가스 공급가격 협상

러시아산 PNG 공급가격은 현재 북한의 통과료 및 토지이용료 협상, 그리고 중러간의 가스관 공급가격 협상과 함께 가고 있다. 먼저, 이번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가늠할 북한에 지불할 가스관 통행 수수료와 관련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월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가스관 통과비용으로 연간 5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8] 이는 한국이 예상하고 있는 1억 ~1억 5,000만 달러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비용과 통과비용의 책정은 누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3자간이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해봐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가스관 건설비용과 북한 통과료는 결국 한국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을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무산될 수도 있다.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국경 통관료는 최저 1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스분쟁[99]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요구한 금액이 100km를 기준으로 1,000㎥ 당 1.09달러에서 1.6달러로의 인상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북한 통과료는 북한 구간 740km, 한국의 연간 가스수입 규모 100억㎥이기 때문에 7.4 X 1.6 X 10,000,000 = 연간 1억 1,184만 달러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통과료는 2010년에 100km 기준으로 1,000㎥ 당

98- Stephan M. Haggard, "More on the Pipeline,"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Sep. 20, 2011. http://www.piie.com/blogs/nk/?p=2887 (검색일: 2011년 11월 1일).

99- 가스관 차단으로 가즈프롬은 11억 달러, 우크라이나는 1억 달러의 손실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ussia-Germany gas pipeline opens," *CNC*, Nov. 10, 2011.

2.70 달러로 인상됐으며, 2011년 1/4분기에도 통과료는 2.84 달러로 인상됐다.[100] 이 통과료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 가스관 통과료는 2억 1,016만 달러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북한도 통과료의 빈번한 인상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경통과료는 제3국의 국경통과에 따른 불편비용을 보상해 주는 대가적 성격을 띠는 것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국제적 표준은 없다. 물론 GATT 규정이 있기는 하다. 즉, 제3국 통과에 따른 수송과정에서 부과되는 통과료(국경통과료, 배관이용료)[101] 및 규제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과료는 파이프라인의 소유와 운영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는 배관의 소유와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료는 국경통과료와 배관이용료가 포함되어 결정된다. 반면, 제3자가 파이프라인의 소유와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면 통과국은 국경통과료만 받게 된다. 통과료의 지불방식은 당사자들간 계약을 통해 현물 또는 경화 형태로 지불된다. 배관이용요율(transportation tariff)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가스 수송량과 수송비용(고정비+운영비)[102]이다.

---

[100]– 2011년 4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크림반도)해군기지의 러시아 사용권을 최저 2042년까지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가격의의 1,000㎥ 당 30%, 약 100달러를 깎아주는데 합의했다. “Ukraine to seek higher gas transit fees at Moscow talks KIEV”, RIA Novosti, June 6, 2011.

[101]– 국경통과료는 transit fee, government charge, royalty 등으로 표현되며, PNG과 최종 소비처까지 도달되는 과정에서 한 개 이상의 국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배관이용료는 수송의뢰자가 배관소유 및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 국경통과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성규, p. 44.

[102]– 고정비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고정설비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고정비의 할당은 가스의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해지는 계약용량(booked capacity)에 비례하여 할당된다. 운영비의 할당은 실제수송물량(actual gas flow)에 의해 할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 국내 파이프라인 수송요율은 거리기준 산정

일단 배관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통과국 정부의 협상력이 기업보다 우위에 있게 되어, 해당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대 배분의 몫을 키우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협상과정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주체들은 대체 수송노선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한 독점적 이윤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한편, 공급자와 수입자가 각각 단독인 경우에 사업구조는 쌍방독점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 공급수단을 갖고 있는 주체가 협상시에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며,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지대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노선 또는 대체 공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산 PNG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 변수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4년째 공급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이를 잠시 보류시켜 놓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으로 관심을 돌린 상태이다. 물론 러시아에게 있어 주요 관심은 한국이라기보다는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사업 시도는 어디까지나 '중국 압박용'이라는 주장도 있고,[103] 설득력도 높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도 이 사업은 가스 가격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러간 가격 협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서유럽 수준의 가스가격 1,000㎥ 당 350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35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4년여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104] 따라서 러

방식(distance-related methodology)에 따라 루블/1000㎥/100km 단위로 책정된다.

103– 장철운, "남북러 가스관은 러시아의 중국 견제용", 『연합뉴스』, 2011년 11월 28일자.

104– 고상두, "러시아 자원외교: 동아시아 시장개척의 고충", 『정세와 정책』, (세종연

시아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강한 의지는 중국과의 가스 가격협상력 제고의 제스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 건설비용 협상

북한 통과 가스관의 건설비용에 대한 추정치 역시 20억~60억 달러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권원순 교수는 22억 3,560만 달러로 추정했고,[105]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 '코가스 보스토크(Kogas Vostok)'는 25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로 추정했으며,[106] 한국 정부는 34억 달러(약 4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107] 그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108] 그러나 이 수치들은 모두 가스관 직경의 크기와 가압소 설치물 구축의 수, 강관 가격의 시세 및 운송비용, 그리고 인건비 책정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액수이다.

건설비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109]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회송시스템(GTS: Gas Transmission System)건설 과정에서 400여 개 이상의 하천(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과 그 지류)과 타타르 해의 네벨스크 해협의 해저 가스관의 건설이 필요했다. 이 가스관 건설에는 근로자 6,500여 명(그 중 1,200명의 극동연방관구 주민)이 참여했으며, 약 140만 톤 화물(큰 직경 강관 110만 톤과 10만 톤 상당

구소, 2011년 11월호), p. 17-18 참조.

105- 유종철,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비 25억 달러," 『연합뉴스』, 2011년 9월 28일자.

106- Stephan M. Haggard, "More on the Pipeline," ... op. cit.

107- 송정훈, "남북러 가스관 합의… 러 현대화 사업 참여 '방점'," 『아주경제』 2011년 11월 01일자.

108- "Russia, South Korea Discuss Gas Pipeline", RIA Novosti, Oct. 24, 2011.

109-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p. 22-23 참조.

의 프로세스 장비의 공급물량 등)과 3만여 개의 철도 화차가 소요됐다.[110] 1,836km의 이 가스관 건설비용에 가즈프롬은 4,670억 루블(1달러 = 28루블, 약 167억 달러)을 투자했다. 1km 당 가스관 건설비용은 870만 달러가 소요됐다.[111] 2011년 11월 8일 완공된 1단계 발트해 가스관(Nord Stream 1,200km, 연간 275억㎥ 용량)의 건설비용도 102억 달러(74억 유로)가 소요됐으며, 1km 당 가스관 건설비용은 850만 달러였다.[112] 가즈프롬의 파트너인 루스에너지(Rusenergy) 컨설팅 회사 미하일 크루치힌(Mikhail Krutikhin)은 2007년에 1km 당 평균 가스관 건설비용은 200~6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다.[113]

2007년 기준으로 북한 가스관 건설비용은 1km 당 최대 600만 달러로 계산할 때에도 44억 4,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사업비용은 그 이하가 될 것이다. 가스관 건설비용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문제들이 또 있다. 즉, 북한을 지나갈 파이프 라인 건설도 러시아가 100% 담당할지, 한국측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지 등이다. 이밖에 북한에 제공될 통관료 지급 방식이나 북한 리스크 해소 문제 등 3국간 세부적 조율로 인해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110– "Gazprom commissions first startup complex of Sakhalin . Khabarovsk . Vladivostok GTS," Gazprom Homepage, 08.09.2011.

111– Aleksandr Gabuyev, "North Korea to pacified with gas," Izvestia, Aug. 22, 2011. http://indrus.in/articles/2011/08/22/north_korea_to_be_pacified_with_gas_12898.html(검색일: 2011년 11월 3일)

112– Juergen Baetz, "Merkel, Medvedev inaugurate new gas pipeline," RIA Novosti, Nov. 08, 2011.

113– "Gazprom to spend $24 billion on Far Eastern gas pipeline," RIA Novosti, Jul. 4, 2008.

다. 기타 제약요인

북한 통과료 지불, 가스관 공급가격 및 건설비용 협상 이외에 또 다른 변수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유동성과 가스자원 물량 확보의 미달 가능성이 있다.

먼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유동성 변수이다. 이번 사업이 실현될 경우 최소 30년 이상 가스관 사용이라는 국제관례에 근거해서 국제 가스시장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가격 유동성 및 각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스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향후 가스시장이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이 될지, 아니면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114] 한편으로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 북미지역에서 비전통적 가스(쉐일 가스, 석탄 가스 등) 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제 가스시세의 하락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스 수요가 팽창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계약에 의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가스 물량의 공급이 과다할 경우 한국은 LNG 터미널에서 LNG의 일본 공급 혹은 부산-쓰시마-큐슈 지역까지 PNG 건설을 통해 일본으로의 가스공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LNG 2위와 1위의 이점을 이용해 공동으로 가스구매 계약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중러 간의 가스 협력이 부분적 협력이나 무산될 경우를 상정,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으로의 가스공급 가능성의 카드는 바람직하다.[115] 이러한 국제환

[114]- 최기련, "2010년 세계 천연가스의 미래,"『디지털가스신문』, 2010년 5월 24일자.
[115]-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 pp. 23-24 참조.

경 변화에 따른 유동성들이 가스 가격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서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 천연가스 자원의 물량 확보 미달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 우려이다. 한국으로 공급되는 가스는 사할린 Ⅲ, Ⅰ, Ⅱ 광구와 2016년 완공되는 야쿠티야 차얀다-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연결사업의 완공, 그리고 차얀다 가스전 개발 여하에 달려 있다. 사할린과 차얀다 가스전의 매장량을 감안하면, 가스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러간 가스 가격협상이 체결되어 연간 680억㎥ 가스가 중국에 공급될 경우, 물량 부족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물량 문제는 카자흐스탄과 몽골 사이의 중러간 국경을 통과하는 알타이 가스관 건설 여하에도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스 생산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이다. 현재 예상되는 가스 생산지는 2014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사할린-Ⅲ 가스전과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 등이다. 하지만 사할린-Ⅲ 가스전의 생산능력은 3.5~4bcm에 불과해 한국의 도입규모(10bcm)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 역시 2016년 혹은 2018년이 되어야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르면 프로젝트 가동시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자원 물량 확보 미달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이번 사업의 경제적 수준에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PNG 사업의 문제점

PNG사업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116]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가스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 수송 인프라의 부족 심화, 에너지 교역에 따른 기본적 '우려' 확산,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어려움, 각종의 환경적 제약, 생산국의 자원민족주의 및 통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기존 시장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가스 매장량 고갈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경간 거래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가스 파이프라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의 국제 교역량은 생산량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율은 2000년 21.8%에서 2008년에는 26.5%로 증가하였다. 제3국 PNG사업은 파이프라인 사업의 고유한 특성, 이해가 다른 주체들의 거래 참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미흡, 이윤이나 지대를 배분하는 메커니즘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일반화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갖는다.

파이프라인 사업은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되고 공사구간의 특성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며, 자연독점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을 경우 독점적 사업자는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경제성 확보를 위해 높은 부하율(load factor)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낮은 배관망 가동률은 고정비용을 증가시켜 사업 수익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기업 또는 배관 운영사는 경직적인 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가스관이

116- PNG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p. 41-43 참조할 것.

건설되고 나면 계약자들간 협상력은 변화하게 되는데, 계약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경직적인 계약구조가 형성된다. 가스 수입국은 가스 공급의 거부 가능성에, 수출국은 그들의 시장 개방 거부에 각각 취약하다. 또한 가스관 통과국은 종종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파이프라인을 볼모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과적 계약구조가 프로젝트의 승패를 좌우한다. 국제적으로 PNG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통과 파이프라인은 국제법에서 법적 지위(legal status)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첫째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117]과 같은 국제적인 협정(협약)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둘째는 통과국의 국내법을 통해 법적 구조 및 체계를 확보한다. 셋째는 제3국 통과 파이프라인 사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적 장치(계약서 등)를 통해 확보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경통과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국경통과 파이프라인 사업마다 제반 여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수출용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통과국과의 수송협정(계약서)을 통해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ECT 및 수송의정서를 통해서 국경통과 파이프라인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3가지

117– ECT는 1994년에 조인되어 1998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ECT 규정은 크게 외국인투자 보호, 비차별적 조건, 분쟁해결, 에너지 사용 및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에너지 효율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는 현재 ECT와 통과수송 의정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 하원은 ECT의 개선을 위한 통과수송 의정서의 협상 타결 이후에만 ECT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형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국경통과 파이프라인의 경우, 통과 권리(transit rights), 제3자 접근(third party access, 또는 freedom to transit), 지상권(surface rights), 소유권(ownership), 통과료(tariffs), 안보와 안전(security and safety),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등과 같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PNG사업은 가스 생산자, 파이프라인 운영자, 가스배송회사, 통과국, 가스 수요자, 그리고 기타 시장참여자(금융기관, 배관시공업자)들에 의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제3국을 경유하는 PNG 사업의 소유·운영구조는 수익성, 위험성, 기술적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수급안정성, 제도적 안정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18] 남북 국경까지의 배관건설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는데, 북한의 높은 국가위험도(country risk)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부담(금융거래비용, 수송안정성 경감위한 장치 등)과 설계 또는 건설과정에서의 북한측 요구에 따른 노선변경이 예상된다.

다국간 PNG 사업의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소요와 장기간의 사업기간, 다국간 통과 등으로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원조달 방식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 전담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제3국통과 PNG사업은 사업당사국(공급국, 통과국, 수입국)간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위험성이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사업위험은 크게 공사이전단계 위험(자금조달 실패, 불확실한 투자보장장치, 통과료 책정시 논쟁), 공사단계 위험(공사 지연 및 중

118– Paul Stevens, "Transit Troubles: Pipelines as a Source of Conflict," *A Chatham House Report,* March. 2009; 이은명(2009) 참조.

단, 지방정부의 비협조, 건설 인력·자재 접근 거부, 불합리한 행정·환경 규제, 무리한 노선변경 요구 등), 운영단계 위험(국유화, 불합리한 통과료 인상 요구, 운영 인력·자재 접근 거부, 가스의 무단 사용, 가스공급량 부족, 불가항력적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의무구매방식(take or pay),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스루 풋 계약(Through-put Contract), 정부보증, 고정비용 일괄도급(EPC) 계약, 금융서약,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각종 위험보증, 통과배관 감시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사업 참여자들 특히 가스 공급국과 수입국은 가스의 안정적 수급확보를 위하여 소유구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판매자는 가스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구매자는 가스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하여야 한다. 전체 사업기간 동안 당사국들의 정치·경제 제도(세제, 환경규제, 에너지 정책 등)의 안정성 유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관한 정부보증을 요구하고, 국가간에 일반적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Ⅴ.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각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스관을 연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할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보고자 한다.

1. 명확한 추진원칙의 설정이 필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의 창출과 각종의 기회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동시에, '북한 리스크'를 비롯한 해결해야 할 각종의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전에 우리는 분명한 추진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119]

첫째, '경제성의 원칙' 설정에 따른 접근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경제성이다. 따라서 한국의 최종 PNG 도입 가격이 LNG 수입 가격보다 월등하게 저렴해야 한다. 북한 경유 통관수수료 및 토지이용료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유동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PNG 가격에 월등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권원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LNG 형태로 러시아산 가스를 도입할 때 비용은 가스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유지보수비와 건설비를 포함해서 226억 달러,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도입하는 비용은 47억90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송비 측면에서 열량단위인 1MMbtu당(47.667MMbtu=0.73톤) 파이프라인에 의한 도입이 0.31 달러로 LNG 방식으로 도입할 때의 0.94 달러에 비하면 30%가량 저렴하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이번 북한 경유 PNG 사업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해 득실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9– 윤성학, "한반도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분석,"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2011년 민화협 화해공영포럼(2011.11.15), p. 53.

둘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유동성은 변수이다. 이번 사업이 실현될 경우 국제관례에 근거해 최소 30년 이상 가스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 가스시장의 변화로 야기될 가격 유동성 및 각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 다시 어떤 요인에 의해 오름세를 보일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러 PNG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업 당사국들간 협정을 국제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분쟁 발생시 해결 메커니즘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국제 가스시장 가격 유동성에 따른 문제점 북한 변수에 따른 위험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셋째, '에너지 공동체의 원칙'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북러 3국 모두가 공히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향후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에너지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 일종의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가격, 통관 수수료 등을 고정 계약이 아니라, 국제 가스가격의 변화와 연동시켜 간다면 가스가격 유동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3국 모두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러간에 이룩한 에너지 공동체를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향후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당사국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남북러 PNG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사업 당사자들간(정부, 기업)에 체결되는 계약서들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120] 사업 당사국들간 협정은 '조약'으로 간주되어 국제법에 의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법의 해석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협정 이행을 강제할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IGA와 HGA에는 통과료 및 지급방법, 배관망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보장, 배관통과 구간의 토지이용 권리·의무, 인력·자재의 자유로운 이동, 분쟁시 중재방식(절차, 기구, 효력 등), 사업 수행에 대한 전폭적 협조에 대한 정부보증 등이 포함된다. 구매계약서에는 가스 인도지점을 남북 국경으로 명시하여 러시아의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수송중단 위험을 고려하여 의무구매방식(take or pay) 및 목적지 지정 조항 등을 완화하는 내용과 대체물량(러시아 극동지역 LNG)의 긴급지원 방식 등을 구매계약서에 포함시킨다.

가스공급국인 러시아가 최종 소비국인 한국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직접 공급하는 사업구조(노르웨이형)와 러시아와 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파이프라인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구조(덴마크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과국(북한)이 존재하고, 국경통과료 지불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게 된다.

노르웨이형을 따르게 되면, 러시아가 남·북 국경까지 공급하는 경우

[120] PNG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p. 43-44 참조할 것.

에 PNG의 국경인도가격은 한국의 LNG 공급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독점적인 수송 및 상류부분 개발에 따른 지대(rent) 부분을 모두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재원조달능력 부족과 소비국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석유교역 사업에서 송유관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차관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비슷한 상황이 남·북·러 PNG사업에도 전개될 경우 가즈프롬에게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극동지역내 가스전(코빅타, 사할린-3 등) 사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덴마크형을 선택하는 경우 러시아가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한국은 일부 지분만을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최종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러시아 측에 있기 때문에 공급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한국은 배관 운영 및 북한측과의 협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송비용 또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배관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각종 위험들을 러시아측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스인도지점은 러·북 국경 또는 남·북 국경 어느 지점이나 가능하며 한·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121]

---

[121]-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pp. 43-44.

3. 북한 리스크 관리방안

북한의 임의적 가스관 차단에 대한 대책으로 가스관 연결시 배관의 형태를 Y자형이 아닌 J자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원순 교수는 Y자 노선보다는,[122] 오히려 북한 동해안을 따라 한국의 고성과 삼척을 거쳐 수도권 가스관 노선을 따라 개성과 평양으로 재공급하는 J노선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가스관을 잠그면 한국 역시 이에 맞대응 함으로써 북한의 가스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장난을 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가스 사용량으로 볼 때, 북한에 비해 한국이 월등하고 그 피해 역시도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남북간 상호 견제는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J자형 노선은 한국의 PNG 길이가 늘어나면서 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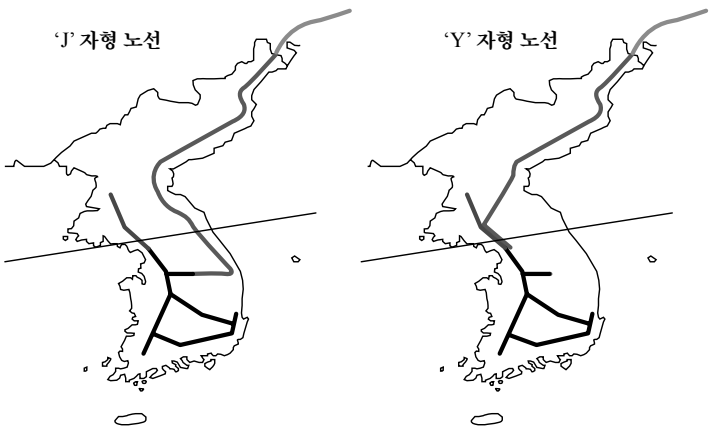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북한의 임의적 가스관 차단시 그 물량만큼 러시아가 한국으로 LNG 공급을 제공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또한 북한의 가스관 차단시 러시아가 차단되는 물량만큼 30% 할인된 가격으로 해상수송로를 통해 삼척 LNG 기지로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123] 그러나 이 역시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러시아 정부의 경

122- 북한 경유지점에 대해 2008년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블라디보스토크~원산~평양~개성~(휴전선 거치지 않고)~인천' 루트를 거론했었다. 안성규, "'몽니'가 걸림돌… 유사시 '해상 운송' 러시아 보증 필수", 2011년 11월 5일자.

123- 정지영, "남북러 가스관 사업, 모락모락 ... 정부는 김칫국부터?,"『민중의 소리』 2011년 9월 15일자.

우 처음에는 북한의 가스관 차단 가능성을 전망하며 LNG로 보상해 줄 것을 확정적으로 약속했으나, 최근 가즈프롬사 당국자들은 이 방안과 관련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가스관 차단에 대한 대책은 한러간에 실현 가능한 수준의 분명한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이다.

<그림-5> 'J'자형 노선과 'Y자형 노선'



한편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이 2011년 9월 완공되면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북한 국경선까지 약 150km, 북한 구간이 약 740km, 남한 구간이 232km로서 총 1,122km로 예상하고 있다.[124] 러시아 구간과 한국 구간은 각국의 비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북한 경유 노선 가스관 건설 재원은 러시아가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혹은 러시아와 한국 양자가 부담하거나, 혹은 다자간 컨소시엄

---

[124]–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2011년 민화협 화해공영포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011년 11월 15일, p. 60.

형태로 부담할지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물론 가스관 사업 확정 이전에 남북러 3자간 고위급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전제조건이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을 위해 3자간 접촉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125]

현재 일각에서는 한국의 가스관 건설 비용부담을 제기하며, 이 사업의 경제성을 문제삼고 있다. 즉, 북한 통과 구간 740km에 해당하는 가스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면 PNG의 경제성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구간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돈 몇 푼 아끼려다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북한측 통과구간의 공사를 러시아에 맡기고, 한국은 휴전선에서 도입계약만 맺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정부가 PNG 사업을 구상한 이유는 향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기본 목적이겠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 방안에 집착해 온 것이었다.

또한, 한국이 가스관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북한측 통과구간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러시아측의 기술표준으로 북한측 통과구간의 가스관이 건설되고 통과료 명목으로 제공할 가스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러시아측에 넘겨질 경우, 가스관 분야에서의 표준문제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이 도입계약만 맺게 되면 PNG의 가스비용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PNG 방식이

125– 이와 관련, 지난 11월 30일 러시아 외무부 특명대사 알랙산드로 티모닌은 현지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즈프롬이 북한구간 700km 가스관 건설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철, "러, 북한 구간 가스관 건설 비용 모두 부담할 것", 『연합뉴스』, 2011년 11월 30일자.

LNG 방식에 비해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굳이 통과의 안정성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126]

4. 3자협력 구조의 활성화 방안

남북러 3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국간 정부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27] 혹자는 수익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차원에서의 3자간 협력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러 3자협력은 아직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의 협력 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남북러 3자간 협력에 관한 일반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보장, 과실송금,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 등을 다루어 나간다면 제도화된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3자협력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의 협정 마련 이후 3자간 협력의 세부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후속조처로서 실무위원회의 창설과 정례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불확실성 제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3자간 관련 공동위원회를 우선 창설하고, 필요할 경우 다자간 협상이나 공동위원회의 창설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자료 제공은 물론 북한을 3자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

126- 김연철,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 pp. 14-15.

127- 남북러 3자협력 구조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성원용, "남북한의 러시아간 3각 경협추진 방안",『정책연구』통권 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pp. 119-120을 참조할 것.

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협력에 있어서 양자간 해결 구도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3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또한 이를 기회로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질서에 편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3자 협력의 재원 공급은 국제기구와 해외로부터의 차관 공여, 3자 혹은 남북러를 포함한 미·일·중·EU가 참여하는 공동은행의 창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3자협력 사업에서의 재원 분담 과정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화자본 부족과 한국의 자본 또한 한계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러 형태의 구상무역 및 바터 거래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북방 진출의 교두보 확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국정부와 민간기업들도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며, 그와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삼각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력과 조율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추진 현황, 3국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 각종의 쟁점과 제약요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경유 PNG 사업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관련국에게 어떠한 정치·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한 동시에 어떠한 장애 및 제약요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더불어 냉각된 현 남북간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분명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다. 실제 사업이 시작되어 3국간 협상이 최적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한국, 북한, 러시아 3국 모두 경제적 측면에서 'win-win-win'할 수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경우 연간 1억 5,000만 달러 수준의 통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128] PNG 건설 참여를 통한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PNG 운영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더불어 PNG 통과 지역에 중소규모의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전력난 완화라는 부수적 이익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향후 30년간 안정된 가스시장을 확보해 총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한중일을 포함 아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PNG 연결로 인한 파이프라인 건설비와 통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LNG보다 약 30~70%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들여

128- 북한에 지불하는 통관 수수료의 경우는 현재 북한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합일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의 1억 5,000만 달러이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5억 달러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4장 1절을 참고할 것.

올 수 있으며, 이외에 한러간 가스관 협력에 이은 에너지 협력과 이를 넘어선 각종 경제협력 및 산업분야의 협력으로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북한 경유 PNG 사업은 3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과 부수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대이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러시아와의 사전 계약형태 및 그에 따른 가스공급 가격과 건설비 비용분담, 그리고 북한의 통과세 부과 방식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29]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경제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둘째,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변수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변수가 '북한 리스크(risk)'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선을 맡겨도 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더더욱 현재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만큼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 국면이 아니다. 즉, 북한은 문서로 된 국가간 합의도 쉽게 파기하는 집단이다. 일례로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건설해주기로 합의한 경수로 건설사업과정에서 미국 및 관련국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신포 경수로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 또한, 남북한간 합의를 무시하고 금강산의 우리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장비를 임의로 강탈했다.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가스관을 건설하면 북한이 대남사업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에너지를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130]

---

[129]– 유럽연합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는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급가격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지수화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 Report on Energy Sector Inquiry*, SEC (2006) 1724, Brussels, 2007, p. 101.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북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협의, PNG 연결 형태에 대한 조정, 국제적 협력기준의 강화 등의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남북러 협상 이전에 북러 간 합의와 협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제도화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보장을 해 준다든지, 북한이 유사시 가스관을 막을 경우나 중간에 가스관에서 가스를 탈취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가스관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리고 물량 부족에 따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북러간에 도출된 합의 내용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이 비록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리스크를 막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셋째, 북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정치적 기대효과에 너무 매몰되어 서두르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 남북을 잇는 가스관 사업은 실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 쌓기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경유 PNG 사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월, 가스관 사업에 관한 남북간 협

[130] 윤규식, "권력세습 안정화 노린 경제·외교적 행보," 『국방일보』, 2011년 9월 7일자.

상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제로 북한 경유 PNG 사업은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프로젝트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 20년간 꾸준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소귀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에 남북을 잇는 가스관 연결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에서의 남북러 가스관 협력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북한 경유 PNG사업은 과거 선례에 비춰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정치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사실 정치와 경제 두 영역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는 학계에서도 오래된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분명 정치가 경제의 상위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 가깝게는 북한이 8월 22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사건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5.24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시킨 것 역시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즉 남북한간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의 경협사업은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남한 혹은 북한 당국에 의해 단절될 수도 있는 영역인 것이다.[131]

---

[131]– 홍우택,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셈 방식," p. 2.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3국 모두 이익의 내용과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3국 모두 이번 가스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와 시급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북한 경유 PNG사업이 첫 삽을 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곳곳에서 3국간 이해관계와 계산법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보다 직접적인 경제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손에 잡히는 실제 이익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부수적 경제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경제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및 역내 영향력 확보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스관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선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큰 틀에서 3국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므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선 뭔가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이유면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면 정치적 이유, 안보전략적 이유면 안보전략 이유로 인해 3국간 어떠한 합일점이 매칭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탈냉전 이후 지난 20년간 이 사업이 이슈화되었다가 사라지고,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한 이유가 3국간을 하나로 이어줄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익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사시키지 못한 원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분명 3국 모두에게 정치·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정치적 필요도 있고, 경제성도 있으며, 각종의 부수적 효과도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사업 실행을 현실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북한 관련

리스크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분명한 추진원칙 설정, 분쟁의 최소화 방안강구, 북한 리스크 관리방안, 3자협력 구조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본 사업을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남일 외.『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성원용 외.『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이은명.『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Anouk Honore. Argentina: 2004 Gas Crisis. UK: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04.

2. 논문

고상두. “러시아 자원외교: 동아시아 시장개척의 고충.”『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1년 11월호).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2011년 민화협 화해공영포럼, 2011.11.15.

김연철.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통일전략포럼-남북정상회담 가능한가』. No. 49(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11.

김정훈.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한러관계를 중심으로.”『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11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11.24.

김천구. “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 보고서.”『현대경제연구원』. 2011.8.7.

백 훈.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전망.”『서울평화포럼: 남북러

가스관 연결 – 과제와 전망』(세미나 발표문). 2011.10.11.

_____. “남북한의 러시아간 3각 경협추진 방안.”『정책연구』. 통권 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신범식. “러북남 가스관 프로젝트와 러북 및 한러 정상회담.”『EAI 논평』 제22호, 2011.10.27.

유진숙. “한러 정상회담 평가: 가스관사업의 현실성과 6자회담 가능성.”『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제204호, 2011년 11월 12일.

윤성학. “한반도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분석.”『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2011년 민화협 화해공영포럼, 2011.11.15.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북한경제리뷰』. 2011.10.

이영형.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11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11.24.

이용권.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러시아의 의도와 실현 가능성?” 『Russia·CIS Focus』 제136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1.11.07).

이윤식.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응방안.”『2011년 통일부 신진학자 정책연구과제 자료집』. 2011.11.17.

평화연구원. “급변하는 한반도정세,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현안진단』. 제32호, 2011.8.30.

한종만.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시각.”『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11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11.24.

_____. “김정일 러시아 방문 이후, 북·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민족화해』. 통권 52호 09-10월호(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2011.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9.5.

Leonid Grigoriev and Maria Belova. “EU-Russia gas relations.” PEI Electronic Publications. Aug 2009.

Paul Stevens. “Transit Troubles: Pipelines as a Source of Conflict.” A Chatham House Report. March 2009.

Smith Keith. “Russia-Europe Energy Relations: Implications for U.S. Policy.” A CSIS Report. 2010.

3. 기타자료

『경향신문』.

『국방일보』.

『뉴시스』.

『데일리 NK』.

『동아일보』.

『디지털가스신문』.

『로동신문』.

『매일경제』.

『매경이코노미』.

『머니투데이』.

『민족21』.

『민중의 소리』.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창비주간논평』.

『통일뉴스』.

『한겨레신문』.

여인곤.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온라인 시리즈』. CO.11-20(서울: 통일연구원), 2011.8.25.

지식경제부,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보도자료」, 2008.9.29.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1년 12월 1일).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1년 12월 5일).

홍우택.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셈 방식.”『온라인 시리즈』. CO.11-23 (서울: 통일연구원), 2011.9.6.

KBS. “이명박 대통령, KBS와의 특별대담.” (2011.9.8).

CNC.

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 Report on Energy Sector Inquiry.” SEC (2006) 1724. Brussels, 2007.

Gazprom Homepage. Sep. 08. 2011.

Izvestia.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OECD.『2010년 한국 경제 보고서』. (2010년 6월 18일).

RIA Novosti.

부록

[부록-1]

용어설명

BP(British Petroleum):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 최대의 기업이며, 미국 엑슨모빌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회사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다국적 에너지 기업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운반의 용이성을 위해 천연가스를 압축한 것으로서, 경유(Diesel)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 등의 대형차량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

CSG(Coal-Seam Gas): 석탄층 가스

ESPO(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oil pipeline): 동시베리아 송유관. 동시베리아와 태평양간의 송유관을 의미. 러시아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유관 건설 사업. 송유관을 통해 생산된 원유를 ESPO 또는 ESPO유라고도 부름.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Gazprom: 러시아 최대의 국영가스회사

GTS(Gas Transmission System): 가스회송시스템

GTA(Gas Transportation Agreement): 가스수송계약. GTA는 가스 수송료 및 수송조건,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배관운영회사와 shipper간에 체결함. GTA는 가스의 인도지점에 따라 체결 당사자가 달라짐.

HGA(Host Government Agreement): 공급안정협정. 배관 통과국에서의 가스공급 중단위험을 줄이고, 배관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배관운영회사와 통과국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협정

IGA(Intergovernmental Agreement): 공급안정협정.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측면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위해 당사국 정부간 프로젝트 보장 협정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해 액화한 것. 선박 1척이 운송하는 천연가스는 약 6만 톤임.

LPG(Liqui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석유 성분 가운데 프로판이나 부탄가스처럼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여 액화한 가스.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용 연료로 쓰임.

MMBTU(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영국의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mmbtu(47.667mmbtu=0.73t)

PNG(Pipe Natural Gas): 천연가스를 산지에서 파이프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가스

Eastern Gas Program: 동부가스프로그램. 동시베리아 및 극동의 가스전 개발, 생산, 공급, 수출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Shell(Royal Dutch Shell plc):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설립되어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메이저 석유 회사

Shell Oil Company: 네덜란드와 영국의 거대한 석유재벌인 로열더치셸그룹 (Royal Dutch/Shell Group)의 주요 미국 자회사

TCM(trillion cubic meters): 가스매장량. 1tcm = 7억 3000만 톤

cf) BCM(billion cubic meters): 가스생산량. 1bcm = 70만 톤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 : 러시아 내 여러 가스전들을 하나의 파이프라인 수송망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가스를 국내 및 해외로 공급하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

[부록-2]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일지

○ 1989년 :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구소련과 가스관 사업의 MOU 체결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육로 또는 해상을 통해 남한에 가스 공급
- 계약 체결 금액, 40억 달러(한화 4조3천억 원) 규모

○ 1992년 7월 19일 - 25일 : 김달현 부총리 및 수행단 10명 서울 방문
-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등과 만나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의견 교환
- 남북러 3국 모두 가스관 연결 사업에 공감대 표현

○ 1992년 11월 18일 - 20일 : 옐친 대통령의 서울 방문
- 노태우 vs 옐친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 공동개발의정서' 체결

○ 1994년 6월 1일 - 3일 :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 사하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모스크바 한러 트레이드센터 건설 등의 경제협력 지원 약속
- 동 사업에 대한 공동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합의

○ 1994년 11월 - 1995년 12월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타당성조사의 추진 주체는 한국 콘소시엄(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3개 한국기업), 러시아 콘소시엄(가즈프롬, 러시아기업가연맹 등), 사하 콘소시엄(사하네프테가스 등 2개사) 등

○ 1997년 11월 : 한중러 코빅타 가스전 공동개발 시작
- 한중러 3국,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코빅타 가스전 공동 개발

○ 1999년 5월 27일 - 30일 :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 정상회담,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PNG 사업에 한국이 참여 희망
- 중러 양자구도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한중러 3자구도로 전환

○ 2000년 2월 9일 : '북 러 친선선린 및 협력조약'을 체결

○ 2000년 7월 19일 : '북 러 공동선언'에 서명

○ 2000년 11월 : 한중러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공동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

○ 2001년 1월 : 공동타당성조사 착수
- 추진 주체는 러시아의 RP,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NPC, 한국가스공사를 주관사로 하는 9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한국 콘소시엄 등

○ 2001년 1월 - 2003년 11월 :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만주통과라인-I은 '이르쿠츠크~하얼빈~선양~대련~서해~평택'의 4,300km 구간에 PNG를 깔고 연간 중국 20bcm(1400만 톤), 한국 10bcm(700만 톤) 공급방안
- 만주통과라인-II은 '이르쿠츠크~하얼빈~선양~단동~북한~평택' 구간으로, 북한 통과를 염두. 총 길이 4,115km, 북한 통과 구간 약 412km

- 한중러 코빅타 가스전에 대한 공동협정에 서명

○ 2003년 5월 19일 : 한국가스공사 vs 가즈프롬 가스산업 분야 협력에 합의

○ 2004년 9월 21일 - 23일 :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러 공동선언' 발표
- 양국간 가스공급 협력을 위해 정부간 협력협정 체결에 합의

○ 2006년 10월 : 한러, 정부간 협력협정(Government Agreement) 체결
- PNG를 통한 가스공급에 관한 '정부간 협력협정(Government Agreement)' 체결
- 동 협정 의거, 한국가스공사 vs 가즈프롬 가스협력의정서(Gas Agreement) 체결

○ 2007년 12월 11일 - 12일 : 모스크바 개최, 제8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 러시아 가스의 한국 공급방안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공동연구 개시, PNG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 시작

○ 2008년 3월 : 한-러 국영 가스회사간 양해각서(MOU) 체결

○ 2008년 8월 7일 : '한러 에너지협력 액션플랜' 서명식
- 러시아산 가스 공급방안의 이행상황 평가 및 향후 계획 관련 협의

○ 2008년 9월 29일 : 한러간 MOU 체결
- 2009~2010년 PNG 공급노선 공동타당성조사 및 노선 통과국간 협의 진행
- 2010년 말까지 상업협상 완료 및 매매계약(SPA) 체결
- 2011년~2014년 기간 중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 건설
- 2015년부터 러시아산 PNG 도입 계획

○ 2009년 6월 - 2010년 4월 : 예비 경제타당성 조사
-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가스의 한국 공급방식(PNG, LNG, CNG)에 대한 공동예비 경제타당성 조사 실시

○ 2010년 8월 : 제8차 가스공사 vs 가즈프롬 부사장급 회의

○ 2011년 6월 : 북러 고위급 접촉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김용재가 가즈프롬의 회장 알렉세이 밀러를 방문,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 표명

○ 2011년 7월 : 가즈프롬의 부사장 알렉산드로 아나넨코프 평양 방문
- 북한 부총리와 원유공업상 등과 만나 남북러 가스관 관련 회담 진행

○ 2011년 8월 10일 :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외무장관 회의
- 주요 의제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경유 한국 공급 프로젝트 논의
-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북한 동참에 대한 설득의지 표명

○ 2011년 8월 24일 :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
-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정상회담
-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에 동참 의사 표명

○ 2011년 9월 15일 : 북러 양해각서 교환
- 북한 원유공급상 김희영 vs 가즈프롬의 회장 알렉세이 밀러, "남북러 PNG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실무위원회 설치"에 대한 MOU 체결

○ 2011년 9월 16일 : 남북러 PNG사업의 장기 로드맵 서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vs 가즈프롬의 회장 알렉세이 밀러, "남북러 PNG사업의 장기 로드맵"에 대한 합의·서명

○ 2011년 10월 26일 : 서울, '제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한러 양국 장관급 회담인 '제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관련 사항 논의

○ 2011년 11월 1일 : 제2회 한러대화(KRD) 포럼 개최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회 한러대화(KRD) 포럼에서 가즈프롬 니콜라이 두빅 법무실장은 9월 15일 합의된 양해각서 내용 설명

○ 2011년 11월 2일 : 한러 정상회담
- 이명박 대통령 vs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정상회담, 로드맵 재합의
- 2011년 10월~2012년 1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협상 마무리

- 2012년 1월~4월 가스공급협정 체결
- 2013년 9월 가스관 건설공사 착수, 2016년 12월 건설 완료
- 2017년 1월 가스 공급 시작

○ 2011년 11월 5일 : 극동 가스 파이프라인 완공
- 2009년 착공한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구간 파이프라인 완공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Ⅰ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Ⅱ)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Ⅱ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북한인권 실상과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 – 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 (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 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김철, 민해봉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양문수, 이석기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Ⅰ)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Ⅲ)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Ⅳ)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o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KINU 통일연구원

9 788984 796317 93340
ISBN 978-89-8479-631-7